

“전국의 각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1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보 도 자 료

2019. 12. 27(총110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 공동사무국 법률연맹 총본부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대한은퇴자협회

국감현장 도처에 법치민주주의 실종, 국정감사는 엉망!

-- 국회(20-4)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D 학점 --

-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 788개로 역대 최대, 감사일 수는 겨우 159일(시찰 20회 포함) -- 부실국감은 필연.
- 국회 사무총장(장관급) 유인태는 헌법/형법/행정법/공무원법을 위반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2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을 흉위병처럼, 근거도 권한도 없이 조폭처럼 국감기간 내내 노골적 방해/훼손 -- 유인태의 즉각사퇴를 촉구.
- 질의만하고 자리를 떠서 텅빈 국감장, 다른 의원 질의는 듣지도 않거나 끼어들기와 막말, 욕설까지 구태 여전.
-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 국감 - 증인(피우진 보훈처장)의 선서·증언거부의 초유사태/파행.
- 기승전 ‘조국(曹國)국감’ 으로 전락 -- 조국 장관 사퇴후도 조국(曹國)국감 계속.
- 낙하산 인사, 공기업비리, 혈세낭비 3종 세트는 문재인 정부 촛불정권에서도 여전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바른미래당 정책위 자료) / 이를 보고도 눈감는 여당, 부패한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 받는 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권자들인 국민은 참담/울화.

국정감사(20-4) 평가회 겸 국리민복상 시상식 : 2019. 12. 27.(금) 09:3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박병석(민), 심재철(한) 등 79명의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선정

1.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21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 (2019년도)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10월 21일 간이총평에서 밝힌 그대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D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간이총평 이후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참 종합감사에서 민간단체의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논란으로 파행을 하였으며,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증인인 강기정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서 막말을 해 파행이 빚어지는 등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 제20대 국회에 대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이번 국감이 ‘D’ 학점 국감이었지만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한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선의 심재철, 박병석 의원과 변재일, 오제세, 정진석, 유기준, 김동철 의원 등 여야 4선 중진위원을 비롯해 7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1)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재선과 3선, 4선의 다선 의원(15명 선정)이 비교적 많이 선정되

있는 바, 여야의 초선의원들이 주로 조국사태 관련 공격과 방어 전선에 투입되고, 전쟁 시에는 공격을 가하는 쪽이 인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경우에는 초선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반면(자유한국당 44명 중 24명이 선정된 반면 민주당은 65명의 초선의원 중 16명만 선정됨), 여당의 경우에는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경륜으로 정책국감을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복귀한 국무위원 출신의원 중에서는 김영주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복귀후 국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2) 야당 의원에 비해 여당원이 소속 의원수에 비해 선정비율이 낮은 것은 국정감사가 국회의 대정부견제·통제의 수단임에도, 여당과 친여성향당이 정부감싸기를 노골화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정치적 중립과 그간의 21년 전통으로 역지사지해 정성평가에서 여당원을 일부 배려해 국민복상 선정비율을 가능한 유지하였습니다.
- 3)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정책국감을 전개한 이주영(국방위), 주승용(국토교통) 국회부의장과 함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정하였는 바, 외교통일위는 국내 국감을 주로 평가하는 데, 매 감사의 정책질의와 참석한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충실하게 정책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을 잘 배려하며 국감운영에 잘 활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4)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21년 만에 최악의 불법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링을 방해하였음에도, 국감공개원칙에 맞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한 배려를 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의 민병두 정무위원장(민)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민), 그리고 재선의 전해숙 행정안전위원장(민)을 선정하였으며,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모범의원 선정에 반영하였습니다.
3.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2019년도 평가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복을 위하여 공정적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하고, 여야를 넘어 제대로 점검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국회법(제114조의 2)대로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정당의 의사(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면 바꾼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행정보좌조직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라면서 운영위 국정감사시 수차지적되었지만, 패스트트랙 등 정쟁에 국회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한 홍위병같은 갑질행태를 자행한 것은 반드시 의법처단 시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 국정감사(20-4)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활동 개관

상명변경의 배경과 취지 :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1년 전부터 사용하면서,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포지티브 의정감시활동의 ‘상징’으로 되어 왔으나, 근년 유권자들을 혼동/기망하는 똑같은 명칭(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짝퉁상이 범람하여 부득불 교육지책(苦肉之策)으로 지난해부터 상명을 국회의정활동, 국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365일 상기하자는 의미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변경·시행하는 것임.

- (1) 《**모니터단의 활동근거**》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인)은 헌법(제1·21조)상의 국민주권과 알권리, 국회법(제7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의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지난 21년 동안 1천명의 모니터들이 헌신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국회의 공식지원<매년 5억원씩>제안까지 사양하면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신뢰와 명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도를 정착시켰다. 《2019년도에 국정감사 감사반장인 상임위원장이 대부분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직접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들의 참관사실을 말하며, 수감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국감말미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시종일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에게 환기하였음.》
- (2) 《**모니터단의 그간업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다른 시민단체들이 네거티브운동으로 국회를 폄훼할 때 ① 포지티브 운동으로 국회 4대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②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으로 국가5부를 건전케 유도하고, ③ 민주국가의 상징인 국회를 시민·대학생들이 감시함으로써 주권자로서 민주정치를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였으며, ④ 국감제도 관행 개선노력을 하였고, ⑤ 국정감사 기간 중 후원회 개최 근절, ⑥ 국정감사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중개방송으로 국민 알권리 제고, ⑦ 국정감사의 과잉영접 등 수감질서 개선, ⑧ 국감의 제도, 내용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감시 우수모델로 외국학자들에게까지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3) 《**모니터단의 조직구성**》 모니터단은 전국규모의 지부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통칭으로 270개 NGO연대기구라고 하고 있다. 모니터 장소가 협소하여 현장 모니터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실제 1천명 이상의 모니터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 인원 및 배치와 공문발송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간사단체인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이 총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국정감사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 보았다면 그 같은 오해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가를 쉽게 알 수 있

다. 국정감사가 16개 상임위원회(17개 상임위 중 정보위 제외)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가 나서서 홀로 모니터링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기관조차 그러한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간사단체를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수년째 계속 간사단체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감모니터단의 간사단체라고 해서 국가예산지원이나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형편이다.

- (4)《모니터단의 평가기준》 국정감사 평가기준 중 2일 이상(오전 오후로 나누어 4회 이상) 결석한 의원을 국리민복상(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1년 동안 모니터단의 각종 발간자료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니터위원 교육을 통하여 안내·공개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회 보좌진 국회출입기자 전문가 등과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그 평가기준에 따라 여야, 친소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평가과정과 기준》 모니터관찰사항에 나온 대로 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참신성 등에 관한 현장·화상모니터위원들의 다양한 추천과 지적이유를 종합하고, 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개별방문과 공식, 비공식의 전문가의견조회 및 평가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8일(금)까지 제출 요청된 국회의원실의 자평 및 추천 내역과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정량평가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국회공보를 통한 공식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국회 인터넷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질의횟수(단순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은 제외하고 증인신문질의와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만 합산함) 및 질의시간을 정량화 하였으며, 언론보도 내역 검토, 국정감사도중 자리를 뜬 이석시간은 모니터위원들의 제출자료를 통해 종합하였다.

정성평가로 정치적 논란이 심한 경우(예컨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문제 등)에는 역지사지하였으며,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인 제도미비 발견(입법개선사항), 국정난맥상이나 부정부패 질타, 예산낭비 지적 등을 핵심 평가대상으로 하였고, 지난해 시정조치사항 점검도 반영했다. 《그동안 많은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자신이 모신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하면 모니터단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모니터단을 모함하거나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이 막겠다고 하며 모니터단의 선정을 인정하게 되었음》

- (5)《선정 우수의원의 수》 전체 감사위원 중 상임위별로 25% 전후해서 국리민복상 수상위원을 선정·시상하는 것은, 고민 끝에 결정된 합리적인 수치이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처음엔 적은 수를 선발하여 우수의원을 시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소수를 선발하는 일이 훨씬 용이함). 그러나 전체의원 중 소수만을 선정하여 시상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원들이 상을 미리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고, 상임위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감사위원들간 경쟁을 높여 결과적으로 좀 더 나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연구하여 25%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2019년도 국정감사(20-4)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한 2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국회직, 당직 순)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방위,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이인영 원내대표 (외교통일위/국회운영위, 더불어 민주당)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상임위원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민주당)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당)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 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다선, 가나순》 ()안 당적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정(정의당) 공(우리공화당) 무(무소속)
국 회 운 영	4	오신환(바) 정양석(한) 고용진(민) 박찬대(민)
법 제 사 법	5	정성호(민) 김도읍(한) 장제원(한) 주광덕(한) 금태섭(민)
정 무	6	김선동(한) 김병욱(민) 김성원(한) 성일종(한) 유동수(민) 이태규(바)
기 획 재 정	6	심재철(한) 김성식(바) 박명재(한) 윤후덕(민) 심기준(민) 추경호(한)
교 육	4	곽상도(한) 박용진(민) 전희경(한) 조승래(민)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5	변재일(민) 박대출(한) 이원욱(민) 박성중(한) 윤상직(한)
외 교 통 일	4	박병석(민) 유기준(한) 정진석(한) 심재권(민)
국 방	4	민홍철(민) 김중로(바) 백승주(한) 이종명(한)
행 정 안 전	6	이진복(한) 조원진(공) 권미혁(민) 김병관(민) 박완수(한) 정인화(무)
문화체육관광	4	김영주(민) 김재원(한) 박인숙(한) 최경환(무)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5	박완주(민) 강석진(한) 김현권(민) 이만희(한) 이양수(한)
산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8	우원식(민) 이종배(한) 김삼화(바) 김정재(한) 위성곤(민) 이철규(한) 이훈(민) 정유섭(한)
보 건 복 지	5	오제세(민) 진선미(민) 김순례(한) 김승희(한) 윤일규(민)
환 경 노 동	4	김동철(바) 한정애(민) 강효상(한) 임이자(한)
국 토 교 통	7	이혜훈(바) 박홍근(민) 윤관석(민) 민경욱(한) 송석준(한) 송언석(한) 안호영(민)
여 성 가 족	2	송희경(한) 정춘숙(민)
비고	79 (73)	정당별 분석<국감당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국무의원 4명 제외 124명 중 31명, 자유한국당 110명 중 38명 바른미래당 28명 중 7명, 평화당 4명 중 0명, 정의당 6명 중 0명, 우리공화당 2명 중 1명, 민중당 1명 중 0명, 무소속 17명 중 2명, <10월 24일 당직 및 의원수 기준> 선정비율 : 341명(운영 28/ 여가 17) 중 79명으로 전체 23.15% 본상임위 296명 중 73명으로 전체 24.66%임

2019년도 국정감사(20-4)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① 교섭단체별 (2019. 10. 24. 국감당시 기준, 손금주 의원은 무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엄용수 의원 포함)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집
선정의원(명)	34	40	8	3
전체의원(명)	124	110	28	30
선정비율(%)	27.42%	36.36%	28.57%	10%
검임상임위포함(명)	144	127	33	34
선정비율(%)	23.61%	31.49%	24.24%	8.82%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4명을 제외한 수치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선정의원(명)	45	20	11	6	3
전체의원(명)	139	65	45	32	15
선정비율(%)	33.09%	29.23%	24.44%	18.75%	20.00%

※ 문희상 국회의장(6선) 불포함 (황영철 의원은 재선, 엄용수 의원은 초선이었음)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1	15	29.41%

※ 감사위원 296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7.23%임(국감중 의원직승계 정은혜 의원포함)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4	71
전체의원(명)	47	249
선정비율(%)	29.79%	28.51%

※ 지역구 의원 250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9	20	40.82%	강원도	8	2	25.00%
부산광역시	18	5	27.78%	충청북도	8	3	37.50%
대구광역시	12	3	25.00%	충청남도	11	4	36.36%
인천광역시	13	5	38.46%	전라북도	10	1	10.00%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0	2	20.00%
대전광역시	7	2	28.57%	경상북도	11	6	54.55%
울산광역시	6	0	0.00%	경상남도	15	5	33.33%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9	10	16.95%	계	249	71	28.51%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경기도는 60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 1명 제외

2019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2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 주요목차 ■

■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활동 개관	3
■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5
■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주요통계(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6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시상식 총괄	7
● 평가회 및 시상식 개요	7
● 2019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2019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간신히 D학점	8
2.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의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11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14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반쪽국감 파행,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16
5.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의원도 ‘조국’ 언론도 ‘조국’	17
6. 민간인 특히 기업인 국감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과제 :	18
7. 국회사무처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한 근거도 권한도 없는 위법	18
8.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19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19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19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20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20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21
● 2019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평가	
1. 국리민복상 모범의원	21
2. 국리민복상 우수위원장	34
3.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의원 (명단 별첨)	45
II. 2019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48
III. 화제(話題)로 본 2019년도 국정감사*	60
V. 제20대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국정감사 전반(全般)	80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시상식 총괄

■ 국감 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인의 공동단장)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21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5명씩 연인원 1,000여명(온·오프라인)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고 온라인으로 모니터를 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였고, 296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1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2019년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2019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2019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간신히 D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해(2018년도) ‘C’ 보다 낮은 금년 국정감사(20-4)의 성적을 ‘D’ 학점으로 최종 평가한다.

(1)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적 질서를 지키고, 영토를 보위하며 국리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알 수 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그에 따라 불거져 나온 의혹의 규명을 위해 수사와 함께 기승전 ‘조국(曹國)’ 국정감사를 전개했다. 한 번에 열거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거의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고, 보도내용은 충격적이기도 하였다.

(3) 조국 수호 쪽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초대형 장외 집회(서초동집회)를 열었고, 조국 파면 쪽에선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실정을 규탄하는 초대형 장외집회(광화문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이후에도 이 같은 양상은 계속되었다.

(4) 국정감사는 이러한 초대형 장외 집회에 파묻혀 있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1) 함박도에 대해 현 정부 전(2017. 5.)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을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독일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저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적박한 1평방미터의 땅을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도 침묵한다면, 결국 그 민족은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함박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박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중국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평화를 줄 수도 없고, 영토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2) 과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가 세금처럼 한전의 전기료에 포함시켜 거둬가는 KBS 시청료의 징수가 위법한 관행임이 밝혀졌다.

3) 과방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열사업에 대한 비리와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4) 산업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수십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해외의 호화건물을 위해 예산낭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농림위와 환노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분석도 없이 마구잡이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6) 교육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딸 사태로 특혜와 특권이 작용하는 입시제도의 병폐를 알게 되어 분노하면서 그 입시제도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7) 전 상임위원회에 드러난 촛불정권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소위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 졌고, 이러한 것이 당해 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조정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8)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정부/여당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공수처 같은 기구의 위험성 제기는 여당의원(금태섭

민주당 의원, 법무부 국감, 대검찰청 국감 등에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는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공수처를 가진 나라가 있는지?’으로서 당론에 불구하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위한 외로운 외침으로 보였다.

9)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의 침체된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0)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색된 한미관계와 대북관계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남북 축구경기 중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색국면임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5) 이번 국정감사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조국’ 이슈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다.

1) 개천절과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8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많은 국정감사가 예년과 달리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사라졌다. 더욱 피감기관 앞에서의 감사위원간의 욕설과 막말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였다.

2)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국감자료 제출을 잘 하라’고 하였지만, 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지연, 거부 지연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법사위의 채이배 의원은 「“국감 자료제출 거부로 국정감사 못 해 먹겠다.”」(보도자료, 10.16)는 자조섞인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열악했다.

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잘못 알아듣고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단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모니터요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국정감사장에서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

4) 여야의 싸움에 더하여 피감기관도 예년과 달리 팔장을 끼고 답변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미술관 입장객수 조작등 명백한 잘못에도 ‘검토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이번만 모면해 보자는 행태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 졌다.

5) 또한 법정공휴일이 있음에도 국감 중간에 쉬는 날짜가 많아졌고, 시찰 또한 여전하였으며 수감기관은 지난해의 753개였는데 오히려 늘어난 788개로 동시수감 기관이 많아져 실제 국감을 하는 날짜는 줄어들고 수감기관은 늘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였다.

6) 또한 11월 1일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의 막말 소동으로 파행을 빚어 비정상적으로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2.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의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교육위, 법사위,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크게 다뤄졌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조국’이란 말이 65회나 나왔고, 4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72회 나왔으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은 10회 나온 반면 ‘조국’은 11회 나왔으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 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이 148회 나오는 등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거의 전 상임위원회에서 기승전 ‘조국’에 모자라서 관련 ‘조국’ 증인 채택문제로 국감이 파행되거나 정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019년도 국정감사 위원회별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이슈 한눈에 보기》

위원회 (위원장)	조국 관련 이슈
국회운영 (위원장 이인영)	○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관련 인사검증 ○ 조국 전 민정수석당시 감찰 무마의혹 등
법제사법 (위원장 여상규)	○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문제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회주의자' 지칭 문제 ○ 조국장관 일가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 ○ 조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공소장 공개 ○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결정 ○ 조국 장관의 딸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

	○ 조국 장관 사퇴에 따른 대통령 책임 여부 및 검찰개혁 ○ 조국 일가 수사의 신속한 진행
정무 (위원장 민병두)	○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 조국 장관의 증조부 논란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적절성과 위법 의혹 ○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주도로 해당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WFM과 익성, IFM, 웰스씨엔티와의 관련성
기획재정 (위원장 이춘석)	○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애플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 조장관 부인 정경심씨 상속세 납부 여부 (국세청) / 정씨의 상속세 탈세 의혹
교육 (위원장 이찬열)	○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논란 ○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직 연장 논란 ○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표창장 관련 논란 ○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관악회 장학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정상적인 과정인지 여부 ○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조사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장 노웅래)	○ 조 장관 딸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문제 ○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 KIST .기념비 조국 딸 이름 ○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애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문제
행정안전 (위원장 전해숙)	○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 ○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안민석)	○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불발 야당의 국감 보이콧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됨)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 황주홍)	○ 조 장관 처남 근무회사 관련 의혹(SM그룹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이종구)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웰스씨엔티 최모 대표와 익성 이모 대표의 불출석(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 최 대표와 코링크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 대표)
보건복지 (위원장 김세연)	○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 강대한 부산대 의대 교수의 관계

	○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 문제
환경노동 (위원장 김학용)	○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특혜 의혹(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진 대학원생의 참고인 증언)

국감 직전에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자주국방태세 정비 및 안보불안감 고조와 관련한 질타가 **국방위**(위원장 **안규백**)에서 이어졌고,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대통령의 방미성과, 외교라인 불화와 대일관계 등에 관한 질의가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에서 집중되었다. 국감직전 산업위로 사보임한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미국 측의 아그레망이 이루어져 10월 10일 이수혁 국회의원이 사퇴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는 기승전 ‘조국’ 이라고 할 정도로 국감 초반 조국 국감(여당의 검찰개혁 포함)에 매몰되었으며, 위원장과 여당의원간의 욕설 논란으로 국감도중 윤리위에 제소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졌고, 난데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접대 의혹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10. 14.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판사의 증인채택 논란으로 파행하기도 하였고, 패스트 트랙수사와 관련해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농림수산물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에서는 첫날 농림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국감 마지막날에 이루어진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돼지열병의 원인과 확산대책의 미흡이 질타되었고,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소관 기관의 낙하산 인사, 특혜지원의혹, 모럴 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는 ‘조국 딸과 나경원 아들’ 국감이라고 할 정도 입시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되었으며, 지난해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쳐 이슈화시키는 등의 성과는 없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에서는 탈원전 대책, 미래 먹거리 대책, 원자력 안전, 가짜뉴스 근절책, 연구기관의 모럴해저드, 부실학회 정리 등이 조명되었으나, 조국 딸 입시부정관련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여야간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한 갈등의 골

이 풀리지 않은 채 국감이 진행되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환수, 문화재 보호, 문화체육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조명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해숙)는 지난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검찰개혁, 선거제도 관련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결가지로 의원 간의 막말 소동이 경찰청 국감, 인사처국감, 대구시청 국감 등에서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첫날부터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일부 피감 기관의 장을 조기 귀가시키기도 하였으나, 10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사장의 귀가로 인해 잠시 파행이 빚어졌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산하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케어, 인보사 사태 등에 관한 정책국감이 진행되었으나,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치매 걱정 발언으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이 집단퇴장을 하여 파행하였고, 윤리위 제소사태까지 빚어졌다.

지난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증세문제를 비롯하여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와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으며,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에서는 손혜원 의원 부친 논란을 비롯해 국가 유공자 공훈정책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를 상대로 중소기업인 살리기 정책(특히 주 52시간제 내년 시행 등에 박영선 장관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대해 조명을 하였으나, 언론에 조명된 것은 이종구 위원장의 출석참고인에 대한 혼잣말 ‘욕설’이었다.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국회는 무려 788개(지난해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역대 가장 많은 피감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작년(753개)보

다 35개가 증가하였고, 현장시찰도 20회(정보위 제외)나 실시했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호통과 음박지르기, 자리뜨기, 상대방 의원에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간의 막말로 인해 윤리위 제소까지 되었다.(10월 8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윤리위 징계안 제출)

지난해와 같이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이번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인격모독이 아닌 ‘질타’, ‘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며 안이하게 답변하였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만 하고 후속점점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위원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양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입성하여 반드시 자신의 질의한 문제를 확인하겠다는 비분강개한 질타도 하였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사항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 해

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
· 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정조치 내지 예산낭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반쪽국감 파행,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은 올해 증인채택문제로 국감 첫날(10. 2)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반쪽 국감을 하였고, 7일에는 증인 채택 논란으로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반쪽과 파행성 정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대부분 6시 이전에 국정감사를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금요일에는 나란히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신경전이 있었으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 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참하였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국감 첫 날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다. 의사진행발언만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지난해(2018)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김경수 경

남도지사의 증인신청 논란으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는데, 올해에는 피감기관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야당의원들이 업무보고시에 의자를 돌려 앉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감 증인이 출석은 하였으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조국 딸 인턴관련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우진 전 보훈처 장관은 선서와 증언 모두를 거부하였다.

5.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의원도 ‘조국’ 언론도 ‘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정책공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안보, 경제, 위생 등 주요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파행으로 치닫게 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 장관 임명’과 관련된 여야간의 갈등은 국회 내에서 대화와 갈등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야당(자유한국당)은 수요일 광화문 집회를,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바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여 한쪽에서는 조국비리 부각과 파면 축구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수호 및 검찰권 남용방지를 위한 검찰개혁을 주장하였다.

거대 여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균형추를 행사했던 제3당인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은 내부문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은 분열되어 의원의 대부분이 무소속화되었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 당은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중에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날날이 파헤쳐달라.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보도)

원래 이번 국정감사 자체가 조국 이슈 외에 언론에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의당(대표 심상정), 우리 공화당(대표 조원진, 홍문종), 민중당(대표 김종훈)의 국정감사는 부각되지 않았고, 다만, 우리 공화당 의원의 국정감사내용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태극기 집회에 전달되었다.

언론 역시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 ‘기승전 조국’ 이라면서 조국 장관 의혹 관련 의원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으며,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이후에는 ‘조국 여진’ 이라며 조국 이슈에 대해 보도하였다.

6. 민간인 특히 기업인 국감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과제 :

32년간 국정감사를 하였지만 민간인 증인에 대한 효과분석조차 없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다가 취소하는 등 그룹총수들을 소환해 호통을 치는 국정감사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기업인이나 민간인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인 증인신청은 국민의 대표가 직접 국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인을 불러 호통, 야단을 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감과 관련하여 민간인, 특히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감이 정부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본질을 벗어나 ‘기업감사 또는 길들이기의 장’ 이 되거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이용하여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인들을 불러 야단칠 게 아니라 국감의 취지와 법에 맞게 그 기업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민간증인을 불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나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그런 연구나 효과 분석 자체가 없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7. 국회사무처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한 근거도 권한도 없는 위법,

갑질행태에 유인태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 국회사무처는 사과·시정할 것

(자세한 20일 동안의 국회사무처의 횡포는 별도 문건으로 작성되어 국회운영위 국감시(2019.10 25) 배포됨)

8.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 · 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목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 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 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 · 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외현지에서 실시하여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보장이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화상 국정감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20대 3차년도부터 국회에서는 감사내용이 화상으로 녹화되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외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장시간 비행 등 비효율적이고, 국정감사 내용은 국감당시 알 수 없으므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재외공관 국정감사 내용을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올려 놓아 국감이후에라도 볼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함.》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
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역대 최다인 788개(지난해 753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19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

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 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서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2016년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2, 3차년도에는 선정하였다.

이번 20대국회 4차년도에는 여야 국회부의장과 주요당직자 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정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국회직, 다선, 가나다 순)

(가)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주영(李柱榮)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유한국당, 5선)은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에 임하여 초선보다 강한 열정과 설득력으로 국정감사장을 압도하여 모니터위원들로부터 큰 호감을 받았으며, 대북 군사대비 태세 등의 난맥상을 끝까지 추적하여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10월 2일(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

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에 위배여부를 추궁하고, 9·19 군사합의문에 대한 장관의 안이한 인식과 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해 집중 질타하였고, 우리가 대응을 안이하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 역대정권보다 많은 19차례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 국방차관인 존 루드가 ‘한국, GSOMIA 연장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언명을 하였다면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희망사항이었는지 확인했다.

남북관계 군사적인 측면에서 비균형적으로 북이 의도한 대로 한미동맹이 하나하나 순차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폐지 축소문제, 비무장 지대 공중 정찰이금지, 우세한 전력자산의 무력화, GP의 남북 불균형 폐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 아닌 대화다’ 라고 국방일보에 처음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방일보의 헤드라인들이 전부 평화, 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분단의 상징 DMZ의 평화 둘레길 재탄생 등이라면서 이러한 것이 군 정신 무장을 와해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예비군·현역 정신교육자료의 난맥상도 지적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교육만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의 보훈 심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의무실의 역할에 대해서 조명하고, 북한이 매설한, 북한이 도발한 지뢰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으로 처리한 것인데,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의 이슈가 되었던 함박도 문제에 대해서도 산림청 증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열띤 감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전협정의 해석을 잘못했든지 무슨 NLL 좌표를 잘못 찍었든지 해 가지고 또 착오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관할권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적군 묘지 추모제와 관련하여 난맥상을 질타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추

모시키고 있다고 질타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절히 지적했다.

국민의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관련해 신뢰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실태에 대해 국방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10월 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드론 사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태를 예로 들면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드론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2014년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 엄청난 우리 기술개발 문서들이 다 도용당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고, 북한의 해킹능력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군 정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글로벌호크 도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였고, 보라매사업(KF-X)과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합참의장이 6.15 사건 즉 삼척사건과 관련해 합참의장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국민 앞에 명시적인 사과를 주문했고, 합참 공보실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와 관련해서 발언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강도 높은 질책과 정책점검을 하였다.

북한의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여부에 대해 지적하면서 합참의 미온적 대책을 추궁했고, 드론에 대한 방어대책을 점검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서 북한의 사이이 해킹에 대한 북한의 해킹 부대와 대비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해서 자유의 소리 방송의 대북 심리전 문제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10월 10일(목) 해군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PPT를 통해서 해군의 기강

해이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즉, 최영함이 훗날 끊어진 사고 또 미사일 도발 있을 때 현역들 골프 물의 또 경계근무 중에 술판 그리고 6월 달에 충격을 줬던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또 7월 달에 2함대 허위자수 은폐·조작 사건 그리고 7월 달, 9월 달 목선을 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해경이나 어민이 발견·신고 사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질타했고, 해군참모총장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군 기강 문제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신병훈련기간을 5주에서 4주로 축소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10일(목) 공군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3월에 천궁 유도탄 정비 과정에서 오발사와 관련된 정책점검을 하였고,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로 지금 KADIZ 침입이 등 공중 감시 임무 수행과 관련된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F-35A 스텔스기를 도입했지만 주변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국, 러시아 전투기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10월 11일(금) 육군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특수임무여단 관련된 정책점검을 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면서 평화·미소 전략과 비난·육설 전략을 병행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글로벌 호크, F-35A 도입하는 데 대해서 ‘삶은 소 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4월 8일 육군 1군단 야전예규 등 16건 비밀문건이 관리기록부에 등재 안 된 보안사고 등에 대해서 정책조명하면서 상급부대의 감시시스템 문제를 제기하였다.

10월 15일(화) 해병대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NLL 지역의 사수를 위한 해병대의 역할과 북한의 해안포 개문과 관련된 대비태세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였고, 한미 연합훈련의 계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10월 17일(목) 육군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드론 공격이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드론에 의한 정찰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장병에 지급되고 있는 휴

대폰의 도박 사용 문제 등에 대해 조명을 하였다.

10월 21일(월) 종합감사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의 초토화 화력계획 수립 발
언과 북한의 비난에 대한 국방부의 무대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항의성
명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SLBM 서너 개 탑재 가능한 북의 3000t 급 미사일 잠수함와 관련해서 이
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조
명을 했으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질
의를 하였고, 계엄문건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팩트 확인 질의를 하였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기밀의 유출에 대한 안일한 대책을 질타하였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대통령 불참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6·
25 전쟁 기념식에도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8년 4월 공군 F-15K 전
투기 조종사 2명이 순직했을 때에도 대통령께서 위로를 안했고, 마린온 추
락사고 때도 마찬가지로 장관이 대통령께 이에 대해 전향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나)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전남 여수시을, 바른미래당, 4선)은 제3당의 중진으로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도 매 피감기관마다 열정적인 감사를 전개하면서 4선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실태를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국민민복을 위한 정책국감을 전
개했다는 평가이다.

10월 2일(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SR과 코레일 사이에 놓여 있
는 문제에 대해 정책점검을 하면서 부처가 산하기관에 대해 조정권을 행사
하는 방향을 주문했고, 정부의 대국민 정책 기망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
판을 하였고, 코레일과 SR 통합 용역 중단문제에 대해서도 조명하면서 정

부정책의 대국민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분양가상한제도와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난맥상도 언급했다.

철도공사와 철도관리공단의 업무분담과 관련해서도 조직간의 알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부채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직분리를 할 때에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부채만 늘었다고 질타했으며, 프랑스는 다시 합쳤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 해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0월 4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LH공사 임대주택 중에서 20%는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면서 이에 대해 정책점점을 하면서, LH공사가 임대료 수입 받아 가지고 관리 비용 따져 보면 연간 한 1조 원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재작년에는 1조 5000억, 작년에는 1조 3400억. 이렇게 수선비가 매년 1조 원 이상 투입되고 순손실은 한 1조 5000억씩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LH가 단지 조성하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주변 토지들이 매각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들이 있어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상태를 영상자료를 통해 지적하면서 공원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행복주택의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늘리는 것에서 정책미달 등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고, LH의 공직 기강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고, 산하기관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정책점점을 하였다.

10월 7일(월)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점

문제를 조명하면서 장관의 약속 문제를 제기했다.

강릉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레일 체결장치 절연블록의 불량품 문제를 사례를 들어서 지적했고, 입실-모량 구간 불량 절연블록 시공 구간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다.

KTX 열차 예매시스템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KTX의 국산화율 저조문제와 유지보수 부품의 3분의 1은 외국산을 수입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10월 8일(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조명하였고, 대전시의 대중교통수단 문제를 점검했으며, 세종시의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보충질의로 세종시, 충남, 대전, 충북 4개 시·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 4개 시·도가 큰 양보와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10월 10일(목)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차선변경이 불법인데도 현재 장대터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영상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그 이유를 추궁했다.

도로공사 28조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고, 미납통행료 증가대책도 주문했으며, 스마트 톨링을 도입문제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10월 14일(월)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장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3년간 61억원이나 투입되었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공인중개사 10만 6750명 중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숫자가 26%에 불과하다며 그 원인을 점검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 문제의 난맥상도 점검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적한 사항인 건설기계 10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 이 대책을 주문했고, 출범 1년이 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편법수의 계약문제를 질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도 않고 국정감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질타하였고,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새벽 5시 반 헬스장 대기 등 직원갑질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10월 15일(화)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정책공조가 긴요하다면서 새만금호 수질 상태가 4등급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새만금 홍보전시관의 중복 설치 등 예산낭비실태를 지적했다.

10월17일(목)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교통방송 운영 예산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거부를 했다고 질타했다. tbs 교통방송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교통공사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에 45%가 독식으로 특혜 지원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 점검했다.

서울시 지하철 파업예고로 시민들이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한가죽에 5년동안 100억원이나 배당되는 등 버스회사의 배당금 지급문제도 조명했다.

10월 18일(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공정한 채용문제를 조명하였고, 입국장 면세점의 실태와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결항·지연 현황을 살피면서 정비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결항·지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10월 21일(월) 종합감사에서는 제도개선 대책으로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퇴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5년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43만 명이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그 금액이 1조 5000억이라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전자대금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KTX 열차 내에 수유실의 문제점을 조명하면서 국가가 어떻게든지 출산

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LH가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2년에 한 번씩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4.9%, 4.8%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인상을 해 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다) 이인영 원내대표(통일외교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민주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서울 구로구갑, 민주당, 3선)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정당 핵심당직자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소홀함 없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내반의 모든 국감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소신과 전문성을 담은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여 모범을 보였으며, 출석한 해외 국정감사에서는 국내반보다 더 충실하게 본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까지 하는 등 다른 주요당직자에 비해 월등히 모범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석을 국정감사장의 잘 보이는 곳에 위치시키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라는 명패를 만들었으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 사실을 매 감사시작 시에 고지해 수감질서를 바로 잡는 등 NGO와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는데 모범을 보였는 바, 4·15 총선이후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례가 전 상임위원회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10월 2일(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시대상황과 외교정책의 큰 밑거름을 진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디를 향할 것인지, 동북아에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피력했고, 외교부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큰 정세의 변동이 이념적 측면에서 잘못 해석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특정한 부분들이 잘못 과장돼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동북아 대전환기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되거나 혹은 방향을 잘못 짚어서 궤도 이탈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최근의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현상들에 대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합의 정신의 핵심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래도 비핵화 문제가 아니냐면서 북미간의 이견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지적을 하였다.

북한의 최선희 담화문이나, 미국의 대북한 접촉 인사들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배경이나 향후의 북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명하였다.

10월17일(목)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결렬인지 전략적인 유예인지를 점검했고,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의 의미와 내용과 미국 측의 입장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하노이 시절보다는 조금 더 말 그대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이런 접근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지 점검했다.

싱가폴 4개 합의 사항 중에서 신뢰구축의 문제로 돌아가서 새출발해야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북미실무회담이 성과를 내는 쪽으로 완전히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결렬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면서, 이후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도로 열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점검했다. 북미실무회담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예를 들면 미국이 계속해서 실무회담 혹은 북·미 간의 협상 이런 것들을 진척시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과 또 북한이 향후 완전히 협상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는 이런 정도에서 이후에 실무협상이나 그것이 잘되면 다시 북·미 간의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있다 이런 정도의 개연성 속에서 이 가능성을 보는 것 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공동 협력 방역 체제를 세우는 문제를 점검하면서, 중요한 국면인 만큼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충질의에서는 평화경제 내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오랫동안 소외된 민통선 이북지역 접경지역 이런 데에서 부터 출발해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 영역이 있다고 피 력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상징 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생태적 가치의 문제로, 사람들의 왕래가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있지 않고 또 경제 개발하러 들어가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새로운 어 떤 생태의 생명의 보고로 바뀐 부분들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조명했다.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남북 간 접경위원회 내지 협력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런 등등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예를 들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한나라거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라도 실행 력 있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시 기회가 된다면 GP 같은 것은 너무 한꺼번에 다 폭파시켜서 철거시키지 말고 좀 보관했다가 하는 것을 제안했다.

10월18일 (금)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KOICA에 대해 ‘경력증 명서 혹은 봉사활동 확인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확립하고 시스템을 정리해서 세워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정양석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11월 말 즈음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전산화가 이루 어지면 나름대로 체계가 확립되고 양식도 통일되면서 이번에 있었던 그런 이러저러한 논란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

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리한 게 있는지 점검했다.

해외봉사단 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 부적응,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취업 문제, 가정사 문제 등으로 중도 귀국하는 이런 비율이 조금 늘어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3분의 1 정도가 개인사정이라는 좀 모호한 이유로 귀국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서 중도 귀국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 점검하고,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도로 이런 기반시설 미비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 지 조명했다.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지난해, 올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10월21일(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종합감사에서는 외교부장관에게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했다.

인건비 분야 내부에서의 비율 조정이라든가 군사건설비 비용 내부에서의 지출 방법이라든가 군수지원비 내에서의 비용에 대한 항목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미군 순환배치라든가 전략자산 전개라든가 주한미군 준비태세 등등 이 추가 항목과 관련한 부분들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점검했다.

방위비분담금 지출 방식과 관련해서 소요형과 총액형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총액형을 견지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소요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소요형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워킹그룹 문제는 우리끼리의 문제인지, 미국과 관련된 것인지 점검했다.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외교상 기밀누설 행위 이것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

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거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해당 대사관만 하는 것인지 모든 해외공관 전체에 그런 지침이 나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것인지 확인했다. 문했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21년 동안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 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국무위원 등 제외),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⑦ 국정감사 일수가 적정했는 지와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고, 시찰 등이 적었는 지 여부**와,

3) **아울러** ① 국감NGO모니터위원회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 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 및 모니터명

패의 마련 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가) 민병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민병두(閔丙楯)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3선의 집권 여당 중진 위원장으로서 강한 리더십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정책감사가 되도록 이끌었으며 저출산, 고령화, 민세먼지에 대한 소신있는 정책질의까지 하였고, 증인채택 문제 등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에도 불구하고, 탕평적 진행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며, 국정감사의 공개취지에 맞게 국정감사 개시 또는 종료시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사실을 고지하고,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정무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의 난맥상 점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불실한 실태조사 및 처벌미약 지적 등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 제도개선에 노력하였다.

정무위원회는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이 순탄하게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좋게 평가되었다.

10월 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3가지 과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는데, 저출산에 관련해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225개 국가 중에 224위로,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인류 역사상 질

병이나 전쟁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최초로 기록되는 사례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병력자원 문제, 학교폐교문제,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조정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고령화와 관련해 노인 의료비 문제, 유전자뱅크 문제 등에 대해 정책 조명을 하였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단 1개도 없다면서, 우리 기업을 평가할 때 그런 지수를 넣어서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좀 더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석탄발전소의 연기 먼지 저감대책을 생수병을 들어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질의 모습을 보였다.

10월 4일(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하나 하나 소개 하였는데, 장병완 위원의 ‘고령자 금융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김종석 위원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영향’, 최운열 위원의 ‘사모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본 고령화시대 국민 자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병욱 위원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을 소개 하였고,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대안을 아울러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7일(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갑질 근절, 재벌 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난맥상이 점검되었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비롯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가 있었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생중계되었다.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중에서 가장 핫한 것 중의 하나가 상권정보라면서, 상권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에 일정한 정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코멘트하였다.

골프존 문제와 관련해서 2014년·2018년·2019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골프존 점주들 입장에서는 골프존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라고 할까, 하여간 거대 자본을 이용하여 대형 로펌하고 계약을 해서 송사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은 송사에 진 것 자체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들어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이 귀담아들으시고, 점주들의 입장을 귀담아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8일(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10월 10일(목)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및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하재현 중사에 대한 보훈처 재심의 전상 결과에 대해 전상 결과가 나왔으며, 하 중사 재심의 결과는 보훈처의 폭넓은 법률 자문과 국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이어질 시행령 개정과 체계 정비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해숙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재선)

전혜숙(全惠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재선의 의정경험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끌면서 여야 의원간 막말 파동에도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국정감사 중 대두된 정책과제 및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지시키고, 매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에 “이 자리에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자 참석해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함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고 고지하여 국정감사장의 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파행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이다.

전 위원장은 또한,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시에 행정안전부 담당 국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엄정 주의와 시정촉구를 주문하는 등 수감질서를 바로 잡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24일(목)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활한 감사가 되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법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위원장이 육성으로 정리한 행안위의 정책질의 및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10월2일(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제도의 개선 문제, 어린이·노인 등의 안전 문제 및 화재사고 등에 대한 대처 문제, 독립유공자 서훈 및 강제동원자 유해 봉환 문제, 정책기획위원회 및 산하 특별위원회 연구용역비 등 예산 집행 문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 4일(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정보경찰 개혁에 따른 경찰관 직무범위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올바른 조정 요청,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의 필요성 제시, 몰래카메라탐지기·음주측정기 등 경찰장비 개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자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정책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 7일(월)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 조속 통과 필요성, 소방장비 보강 및 화재 진압 방식 고도화 방안 마련, 특수건강검진 후 정밀건강검진 필수화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노력과 현장직 소방공무원 승진을 제고 필요성, 소방관 피복 안전성 보완 및 만족도 전수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성, 주취자 폭행 관련 소방관 안전 대책 마련, 주방 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용품 품질 관리 부실 문제점, 지역별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 등 정비에 따른 소방 공백 해소 필요성, 화재 진압 후 장비·복장의 오염물질 제거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 8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강화, 사전투표의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SNS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의 필요성,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 색깔 이상자를 배려한 투표용지 색상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점검이 있었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성,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공상 지원 등 지원 필요성,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 여성 고위 공무원단 부족 문제점 개선과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장려 및 남녀평등 정책의 시행 및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질의 및 점검이 있었다.

10월 14일(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대상에 다문화가정·탈북민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개선 필요성,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 및 관련 기관 협력 등 적극 조치 필요, 서울시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 서울 청년수당 지급 관련 행정 실수에 대한 조치 필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제시 등의 정책질의와 질타가 있었다.

10월 17일(목)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감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공단의 정책적 노력 필요, 노후승강기 안전진단 점검 강화 등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안전공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8일(금)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건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기아동·노인·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과 수도권 낙후 지역의 중첩 규제 문제 해결, 경기도 광역버스 정차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점검이 있었다.

10월 24일(목)에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노인 보행자 보호·어린이 승하차 구역 신설 등 교통약자 대책 마련,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전문가 참여 확대,

출장비 부당 수령을 통한 예산 낭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조치, 경찰의 엄정한 수사, 조직 관리 철저, 사건 대응 강화 필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철저 등 정책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3선)

김학용(金學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은 특유의 친화력과 엄정하고 추상같은 날카로운 진행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정책국정감사로 이끌었으며, 국정감사 중 의원들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감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감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발언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아 충분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이며, 의사공개의 입각하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시종일관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김 위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국방위와 협조하여 멧돼지 소탕 작전을 전개하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잔반문제의 난맥상에 대해 질타하였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신문과 질의시에만 참여하도록 대기시간을 최소화는 데 기여하였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피감기관 직원 등 국회를 찾은 이들에 대한 배려 조치를 하여 국민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평가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환경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서 10월 2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까지 원만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위원장의 육성으로 정리된 정책내역은 다음과 같다.

10월 2일(수) 환경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관리 강화, 굴뚝 TMS 수치조작 방지대책 마련, 경유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 필요, 석포제련소 환경피해 예방의무의 이행 필요, 방치폐기물 대집행 후 위탁처

리업체에서 다시 방치되는 문제,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산 대체공급 강화 필요, 전자담배전지의 재활용 필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부족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규명 필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위원회의 직제 협의 조속한 완료 필요, 안전검사 미 실시 생활화학제품 유통 방지 필요, 페인트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관리 문제, 건축자재와 가공제품 등 라돈 관리 문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문제, 영주댐 담수 재검토 필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협업 운영 필요, 축산농가 자가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 강화 등에 대해 질의와 점점이 있었다.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전화 수신을 개선 필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및 감사원 결과에 대한 책임 이행 문제, 신중한 기금운용 및 손실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반환에 대한 방안 마련,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산재 감소방안 필요, 고용현황 객관적 판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국내법 위반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실효적 조치 필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및 52시간제 적용 유예 문제, 반도체사업장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필요, 여성 의료인, 여성 건설근로자 등 여성 노동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 자문변호사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내일청년채움공제 등 안정적인 정책집행 문제 등에 대해 질의와 점점이 있었다.

10월 8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평가 시 화해에 대한 배점이 높아 화해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 및 민주노총 불참과 미조직 근로자 등 근로자위원회의 대표성 문제, 노동위원회 위원의 반말·막말 문제,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저조한

문제, 노동위원회 심판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 현장조사 및 진술 기회가 없고 특정 사용자위원회 사건이 편중되는 문제, 한국잡월드 노사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실적이 전무한 문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대한 사업장의 상습 불이행 문제, 노사발전재단의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성희롱, 출장비 부정수급 등 고질적인 조직 기강 해이 문제, 건설근로자 공제대상의 사각지대 과다 및 퇴직공제금 수준의 과소 문제, 부실한 인증과정으로 인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등 법정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10일(목) 한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규정 현실화 문제, 기준치 157배의 우라늄이 검출된 상수도에 대한 즉각대응,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인접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 보완 필요, 처리기한 지난 감염 의료폐기물의 방치 문제, 영산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및 시설 노후 문제, 불법 산업폐기물 방치 문제, 수계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회의 운영 및 연례적 예산 불용 문제, 대구산단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 문제, 캠핑장 오수 발생 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 필요, 위해 우려 식품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주도 송악산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문제, 공동하수처리장 관리인원 부족 문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하여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필요성,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처리 가능함에도 타 일반 업체에 소각처리를 위탁한 문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해도 혼합하여 수거하는 문제, SRF 열병합발전소 먼지 배출 수준이 타 발전시설보다 낮음에도 규제는 더 과도한 문제, 민간 소각시설의 과도한 가동률 문제, 일부 자동차정비사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폐기물 보관 등 관련 법령 위반 문제, 지방환경청의 드론 활용실적 부진 문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 영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청송

군 풍력발전사업 추진 문제, 새만금유역 수질환경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중단 상황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 11일(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PC 우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편법 근로 문제, 포스코 크레인 협착 사고 등 산재 사고 다량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하청업체 엘리베이터 공사 사망 사고에 대한 티센크루프의 원청으로서 책임 문제, 청년실업률이 높음에도 지지부진한 대구형 일자리 사업 추진 문제, 드라마 현장에서의 근로감독 능력 대응,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저조한 기소율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쏘카·타다에서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프리랜서 문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건 처리에 45일이 걸리는 서울청 등 산하 지청 문제, MBC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종결한 문제, 대학교 여성청소근로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계획서 요구로 종결 처리한 문제,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채용박람회 문제, 농축산업 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필요, 임신순번제·초과근로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노동청의 역할 미흡 문제, 안전교육 부실, 안전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이월드의 아르바이트생 사고에 대한 대책, 지역 고용 거버넌스 체제 정비의 필요성,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티센크루프 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개고기 접대 사건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문제, 전남대병원이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사무국장장으로 연임시키는 등 총체적인 노동법령 위반과 고용노동청의 방관 문제, 사측의 감시하에 이루어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동의서 서명절차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 18일(금) 환경부 및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에 대한 준비 미흡,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의 비정상 운행 피해, 환경장비 국산화의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는 문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평가 점수 중 독자성 지표 산정의 문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 문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폐기물 재활용 등 저감대책 마련 필요, 영수증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의 비스페놀 사용 문제, 탁도계 조작에 대한 관리 및 점검 필요,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의 사과 및 피해자 구제대책 필요, 쓰레기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고속도로 소음저감 수준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문제, 환경 분야의 남북협력 필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필요, 사육 곰 불법증식 및 불법판매 문제, 고농도 염분 지하수로 인한 농업피해 문제, 유통업계 과대포장 문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기관 간 중복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21일(월)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직원에 대해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인권침해 우려, KBS·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한 채로 남아 있는 취업규칙에 대한 점검 필요, 노동존중사회 공약 실현을 위한 역할 필요, 근로자대표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 점검 필요, 청년친화 강소기업에서 과로사 및 과로 자살이 잦은 문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일반 고용시장으로 이동이 저조한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문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음에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호도하는 문제,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산재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문제, 최저임금 동결, EITC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전환 필요,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적 고용세습 실태,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방송작가, 학교급식 노동

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KT와 ktcs의 위장도급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문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파업 결과 합의사항인 인력 증원 계획의 이행이 미진한 문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관련하여 하루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작업자 및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 한국오라클과 이에 동조한 수사당국 문제, 엘리베이터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 불합리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방법

-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BEST, WORST)
-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 04)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 · 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 · 확인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21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 · 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18) 일문일답식(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 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21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 25) ① 국감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후에,
 - ② 형식상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질의하지 아니한 의원(주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 등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의원별로 총질의 횟수와 총질의시간을 통계화 하였고)과,
 - ③ 너무 이석이 잦거나 장시간 이석함으로써 타 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의원과 똑같은 질의만 하는 의원은 국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평가는 하되 감점대상이며,
 - ④ 그런 연후에는 질의 내용의 정성평가를 하여 선정함.
-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 27) 유권자를 우롱하고, 국회를 망치는 ‘짜통상’의 수상소식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 홍보의원은 감점함
- 28)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II. 2019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2019년도 간이총평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음)

1. 수박겉핥기 2019년 국정감사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는 평균 6.1개 기관(외교통일과 정보위 제외)이었다.

하루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 13개 기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하루 평균 10.7개 기관을 감사하였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 2개 기관,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7.1개 기관, 법제사법위원회는 6.9개 기관이었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수감이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30회나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감사한 경우가 각각 4일이나 되었다.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는 22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421분 동안 진행되어 기관당 평균 19분 정도 밖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 10월 10일 사감위 국감 등에서 9개 기관에 대해 317분 정도 감사를 하였으며 기관당 평균 35분정도 감사한 꼴이 된다.

《2019년도 10개 이상 동시 수감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전체 감사일수 (시찰포함)	시찰제외 국감일수 (시찰포함) (시찰일수는 국감일수는 포함)	전체 감사대상기관	1일 평균 감사대상기관 수	10개 이상기관 동시수감일수
국회운영	2	2	9	4.5	0
법제사법	11	11	76	6.9	4
정 무	11	10	45	4.5	0
기획재정	10	10	29	2.9	1

교육	8	7	91	13	4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12	10	82	8.2	3
국방	11	9	64	7.1	3
행정안전	11	11	32	2.9	1
문화체육관광	10	7	75	10.7	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0	10	34	3.4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1	10	61	6.1	3
보건복지	10	9	45	5	3
환경노동	12	10	71	7.1	4
국토교통	10	10	32	3.2	0
여성가족	2	1	6	6	0
계	141	127	752	6.10	30

*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수치임

(2) ‘한마디’ 말 못하는 들러리 기관

이번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5개 이상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장관의 질의 답변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참석한 피감기관장 중에서 감사위원의 질의를 못받은 경우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사위	10월 2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4
과방위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방위	10월 2일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	22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중기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 등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교육위	10월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1
과방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보복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회기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6
환노위	10월 7일	기상청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APEC 기후센터	11
국방위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대학교	1
정무위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88관광개발(주)	1
과방위	10월 10일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
중기위	10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환노위	10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5
과방위	10월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7
환노위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위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3
법사위	10월 15일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2
산자위	10월 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1
산자위	10월 16일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보복위	10월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1
문체위	10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1
행안위	10월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2018년도 국회 내 병합(동시)감사 중 질의 받지 못한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질의를 받지 못한 대상기관	
10월 13일 (금)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월 16일 (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립무형유산원 (대행체제임)	
10월 17일 (화)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지원센터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APEC기후센터	수도권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10월 18일 (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10월 19일 (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동극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시아문화원 국립현대무용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진흥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정보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3) 마음은 장외집회, 다음 총선 공천, 열의를 가진 국정감사진행이 안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첫날은 4개 위원회가 11시 넘어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4일에는 2개위원회 7일에는 1개, 10일 1개, 14일 1개 17일 1개, 마지막날인 21일 2개 위원회 2개로 모두 12번 밖에 없었다. 피감기관은 늘고 감시시간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되었다. 특히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앞둔 8일부터는 거의 심야 국감은 사라졌고,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에는 겨우 4번 밖에 없었다.

이외에 결임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1일 파행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자정을 넘겼으며, 2일 모두 밤 11시를 넘겼다.

《밤 11시 넘은 2019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2일 (수)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경제·재정 정책)	정부세종청사 10:00	10:02	23:30
	교육	교육부	국회	10:07	23:2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10:07	23: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 특허청 등	국회	10:07	23:19
10월 4일 (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5	23:48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02	23:34
10월 7일 (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I (에너지)	국회	10:10	23:16
10월 10일 (목)	국토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	10:17	23:39
10월 14일 (월)	국토교통	한국감정원 등	국회	10:05	23:03
10월 17일 (목)	국토교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서울)	10:03	23:39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21일 (월)	교육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국회	10:06	23:57
10월 21일 (월)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국회	10:00	23:23
10월 25일 (금)	국회운영	국가인권위/ 국회사무처 등	국회	10:4	23:50
11월 1일 (금)	국회운영	대통령 비서실 등	국회	10:04	24:21

(4) 저녁 6시 이전에 일찍 마무리되는 국감은 늘어남

18일 금요일까지 6시 이전 국감 종료 횟수는 총 28회였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국정감사는 6시 이전에 끝나고 6시 이후라도 8시 이전에 일찍 국정감사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지방 분반 국정감사는 6시 이전에 종료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부터 5일간이나 6시 이전에 끝나고, 하루는 간신히 6시를 조금 넘겨서 끝났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기 종료하는 위원회 중에 한 곳이었었는데 오후 6시 이전에 끝난 경우가 3번이나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번,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반이후 2번이 있었다.

《2019년도 오후 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끝난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2일 (수)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회	10:07	17:21
10월 4일(금)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회	10:04	17:19
10월 7일(월)	국 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10:11	17:58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시작	끝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경기 과천)		
10월 8일(화)	국토교통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10:05	16:08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대전)	10:00	13:37
10월 10일(목)	행정안전	<지방1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대구)	10:03	14:46
		<지방2반>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무안)	10:00	12:01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청 (무안)	14:01	16:15
	문화체육관광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회	10:04	17:45
10월 11일(금)	행정안전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부산)	10:01	15:09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15:32	17:14
		<지방2반> 전라북도	전북도청 (전주)	13:39	15:43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	10:01	12:40
10월 11일(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경찰청 등	국회	10:04	17:45
10월 14일(월)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등	국회	10:15	17:44
10월 14일(월)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공단 (원주)	10:05	17:54
10월 15일(화)	교육	<감사1반> 전남대학교, 병원 등	전남대학교 (광주)	10:04	13:02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전남대학교 (광주)	14:10	17:06
	교육	<감사2반> 경상대 등	경상대학교 (진주)	10:01	12:49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진주)	14:30	17:31
10월 15일(화)	국방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발안)	10:09	13:06
10월 15일(화)	행정안전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홍성)	10:05	15:12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예산)	15:39	17:01
	행정안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인천)	10:05	12:4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 시청감사 종료후	14:01	16:00
10월 15일(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	10:02	16:25
10월 15일(목)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회	10:00	17:55
10월 15일(목)	국토교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군산)	10:07	13:15
10월 17일(목)	기획재정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주)	10:02	12:23
10월 17일(목)	기획재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10:02	12:13
		부산지방국세청 등	부산본부세관 (부산)	15:29	17:51
10월 17일(목)	국 방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전사령부 (대구)	10:02	12:20
10월 17일(목)	행정안전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회	10:05	17:47
10월 17일(목)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회	10:03	17:20
10월 17일(목)	보건복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회	10:01	17:41
10월 18일(금)	법 제 사 법	군사법원	국방부	10:05	17:13
10월 18일(금)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10:05	15:00
10월 21일(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국회	10:06	17:28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반장 박정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8시간 비행기 타고
가 피곤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나온다.

미주반 첫 피감기관은 주UN대표부로 국회공보에 의하면 15시 02분에 시작하여 18시 57분에 끝나 3시간 55분에 국정감사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구주반은 첫 국정감사를 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EU 대표부였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2시간 1분 정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파행성 정회는 줄어 듦 — 싸우면서 그냥 진행

파행성 정회의 경우에는 첫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증인신문 도중에 일시 정회를 한 것으로 시작으로 11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등 총 7회 파행성 정회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회로 가장 많았는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증인 채택 논란으로 잠시 파행을 거듭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위원의 대통령 치매 우려 발언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장전담부장판사 증인출석문제로, 국토교통위는 도로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로 일시 정회를 하였고, 정무위원회는 18일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관계로 일시 정회를 하였다.

2. 4년차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도 나타남

(1) 내년 총선의식을 한 4년차 국회의원의 지역관련 질의 증가

○ 이개호 의원(과방위) 기초과학연구단 지역편중 과도, 광주지역은 전체 대비 연구비 4.8% 불과(10.11. 보도자료)

○ 송갑석 의원(산업위), 광주전남 산업R&D예산 최하위, 전국 대비 1.6%

○ 조배숙 의원(산업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에 전라북도 기업은 최근 3년간 코트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1628개였는데, 이 가운데 전북지역 기업은 중복을 포함해 전체의 2%인 33개에 불과했다.

○ 강원도 산불(산업위) 이철규 의원 : 강원도 산불 중소기업자들 대책

○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 : 김관영 의원

○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전통적으로 기계·소재·부품산업이 발전해 있고 지정학적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집중적인 외자 유치로 기계·소재·부품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의 코트라 국정감사)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고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적한 것으로 내세운다.

(3) 국정감사 준비보다는 지역구 행사 챙기기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 블로그에 보면, 국정감사 소식은 국정감사 현장시찰 1건인데, 국정감사 중인데도 지역구 행사 참석 및 광화문 소식은 크게 홍보하고 있다.

(4)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4년차에는 자료 안주기, 버티기가 더 심해지는 듯하다.

(5) 역대급 자리 안지키기

MBC에서 텅빈 국정감사장(산업위 국정감사장)을 보도할 정도로 자신의 질의 시에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4년차 국정감사의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모니터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하였다고 하고 있다.

10월 17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중에 18시 53분경 박병석 의원의 질의시에 여당 의원은 박의원 외에 1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캄캄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현황에 국회의원의 프로필 연락처 보좌진 이메일 주소 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란이 공란이거나 소개 되어 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사실상 홈페이지(SNS 포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감사위원 대비 21%나 되었다. 10명에 2명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차에도 홈페이지를 소개하지 않고 있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중에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홈페이지 소개가 없었다.

가장 홈페이지 소개율이 저조한 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로 소소위원 28명 중 16명 밖에 소개 되어 있지 않아 소개율이 57. 14%였다.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10월 10일 목 일과시간)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2	66.67%
정무	24	21	87.50%
기획재정	26	23	88.46%
교육	16	13	81.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5	75.00%
외교통일	22	19	86.36%
국방	17	15	88.24%
행정안전	22	18	81.82%
문화체육관광	16	13	8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3	68.4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	16	57.14%
보건복지	22	20	90.91%
환경노동	16	13	81.25%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국토교통	30	22	73.33%
계	296	233	78.72%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40%미만이 공개하고 있었다. 단순 기사나 사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지를 조사해본 결과이다.(국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우만 조사한 것임)

《 2019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

(조사일 10월 10일 목 일과시간)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9	50.00%
정무	24	5	20.83%
기획재정	26	9	34.62%
교육	16	9	56.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7	35.00%
외교통일	22	7	31.82%
국방	17	10	58.82%
행정안전	22	11	50.00%
문화체육관광	16	4	2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5	26.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	8	28.57%
보건복지	22	12	54.55%
환경노동	16	6	37.50%
국토교통	30	14	46.67%
계	296	116	39.19%

Ⅲ. 화제(話題)로 본 2019년도 국정감사*

1.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 소품 일부 사례

(1) 김진태 의원의 국대 떡볶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였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 떡볶이” 라면서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 공개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2) 송희경 의원의 와이파이 배낭식 이동기지국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 커다란 와이파이 문양이 그려진 배낭식 이동기지국을 멘 남성을 등장시켰다. 송 의원은 “(배낭식 이동기지국이 있으면) 산불이 났거나 재난 현장에 가면 주변에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 며 “그런데 다 개발이 됐는데 규제 문제로 해외로만 수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임시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가 일부 기능만 한정해서 허가를 해줬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정부가 우리 세금을 써서 (지원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3) 송희경 의원의 라돈 속옷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송희경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 가운데 여성 속옷도 있는데 여전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속옷을 직접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제품을 뜯어보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교환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며 “방문 측정 서비스는 완료가 됐고 자가 측정해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설명대로 해보니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4) 송희경 의원의 드론 재머

송희경 의원이 무선통신을 방해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머’를 꺼냈다. 송 의원은 이 장비를 사용하여 드론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보였다. 송 의원은 “원전 주변에 불법 드론이 나타난 것이 지난달에만 4건이 있었다”며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²⁾.

(5) 박경미 의원의 왕따 체험앱

박경미 의원은 10월 2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왕따 체험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진 ‘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앱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자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고 가상의 가해자들이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고작 40초에 불과한 체험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통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다수 학생이 관련돼 있지만 학교급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안이 많아서 조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 이외에도 손희경 의원의 질의시에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소품으로 등장했다.

(6) 송희경 의원의 김박사 넷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박사넷’이 등장했다. 김박사넷은 스타트업 ‘팔루썸니’가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연구실 정보 공유 사이트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박사넷 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려는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면서 “과학기술원 4곳이라도 연구실 정보를 오픈할 생각이 없나” 라고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신 총장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에 이 문제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7) 김한정 의원의 내란선동 고발장 봉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4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내란선동 등을 꾀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RO’가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죄, 내란선동죄를 기초로 불순한 사회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8) 김영호 의원의 폭발 자동소화장치

2019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나온 김 의원은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 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다” 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으로 부른 제조업체 대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의 안 보이는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다” 며 “문제는 소방청이 (폭발 소화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확보도 못 하고 의원실에 요청해 가져다줬다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9) 이용주 의원의 ‘성인용 리얼돌’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리얼돌을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을 자신의 옆에 두고선 리얼돌의 수입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10) 유기준 의원의 ‘통일부 사전제작’ 대북지원용 쌀 포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겹면에 표기된 쌀 포대를 보여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사전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근조 KBS’ 피켓

10월 17일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은 ‘근조 KBS’,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감사를 하였다. KBS 보도의 편향성 문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의혹 제기 등을 문제 삼았다.

(12) 박성중 의원의 AR(증강현실) 고글

10월 15일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AR(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질의를 하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보인다” 고 하였다.

(13) 정세균 의원의 '증도가자'(證道歌字)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가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통해 공개되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보물로 지정된 책 '증도가'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번각본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 언론에 뜬 국정감사장의 증인, 참고인

(1) 양 모씨('멕시코서 누명 옥살이' 참고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지난 2일 외교부 국감에는 누명을 쓰고 멕시코에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서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체포돼 3년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다. 양씨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 임 모씨 대학생원생(청년 일자리 대책)

환경노동위원회의 11월 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고려대 대학원생 임모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임씨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임씨는 조국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 의원의 질의에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고 토로했고,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3) 임은정 부장검사(검찰개혁 관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는 것을 국민이 모두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난장판인 상황”이라며 “국민이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하고 방어하는데 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민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하는데, 상급자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로서 아프지만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며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취소했다.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월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돌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무기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그룹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은 신동빈 회장에서 조정수 롯데푸드 대표로 교체됐다.

(5) 명재권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국 동생의 영장심사를 기각한 명재권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가 이번 국감의 화제가 되었다. 야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이 전날 있었던 민주당의 법원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법원의 오점이라고 질타했다. 14일 서울고법 국정감사 때 출석요구관련 파행을 초래했다.

(6) 윤운상 넥스지오대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 윤운상 넥스지오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던 회사이다.

증인신문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3차 물주입 후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 취했나?” 라 하자 윤 증인은 “특별한 조치나 지시가 없었다” 고 말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했음을 증명해준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관기관인 넥스지오라도 사업 중단과 조사 의뢰를 제안했어야 했다” 며 정부와 주관기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윤 증인은 “포항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고 답했다.

(7)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재위의 10. 2.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자 “경제학 전공인줄 알았더니 아니다”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8)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선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특혜’ 의혹 등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자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장관 후보 거론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9)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관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 며 발언대에 섰다.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 고 말했다.

(10)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10월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 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 고 밝히면서, 이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지원금 돌려막기 이외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사업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문제도 공개했다.

(11) 명 샤오원 화웨이지사장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지사장이 10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다.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국내에 구축한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결코 백도어 같은 위협을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원한다면 ‘노백도어’ 협약도 맺을 의향이 있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외신 블룸버그가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지적하자 명 샤오원 지사장은 “백도어는 자살행위이며 화웨이는 그간 전세계 주요 국가와 통신사에 납품한 장비에 결단코 백도어를 심은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백도어란 장비에 비밀프로그램이나 초소형 칩셋 등 부품을 숨겨 해당 장비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통로를 말한다.

(1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월 21일 국방부 종합감사에 지난해 ‘촛불 계엄령 문건’이라며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 오늘 인지했다”며 국감이 끝난 후 문건 공개 등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야당은 ‘흠집내기’이자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해 국방위 종감은 비공개 전환 후 일시 파행했다.

3. 곤욕을 치른 피감기관의 장

(1)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

한국당 의원들의 손팻말 때문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가짜위원장 한상혁 즉시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자신의 노트북에 부착했다. 즉,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우리 당 의원들은 한상혁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한 반성 등이 취임 후 행보에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당연히 (한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국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볼 낯이 없을 것”이라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의 지적 이후 한 위원장의 증인선서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위원장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를 국감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퍼포먼스’였다.

(2)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자유한국당 강석호·김태흠·이만희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여권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흠 의원은 공사의 황호선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황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고교를 같이 나온 학연이 있고,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특수 관계’” 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등이 채용된 SM 그룹에 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액의 21%에 달하는 1천360억원을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3)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10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태풍 미탁이 상륙하면서 이강래 사장은 상황 대비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다.

이석을 해도 좋은 것은 태풍 피해 대책을 위한 것이었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봤다고 답변을 하였다.

(4)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 대변인”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10월 2일 국방위 국정감사는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북한 대변인’이라는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샷대질까지 오가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국방위 공방은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고 북한이랑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자 “뒤에 설명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을 끊거나 “들어

보세요” 라고 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일찌감치 함박도는 NLL(서해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이같은 압박은 사실상 한국당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려는 성격이 짙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동료 의원이지만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은 삼가 달라” 며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 고 항의했다. 홍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동료 의원 간 토론을 못 하게 돼 있다” 고 반박하기도 했다.

(5) 조국 법무부장관

2019년 최대의 화제 피감기관장으로 국정감사 하루전 사퇴를 하여 결국 조국 없는 조국국감이 되었다.

(6) 박원순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10월 17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 시장님은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신경 쓰고 있다. 금년에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약 150억원을 투입했다” 며 “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8억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가 북한에 평양시 발전계획” 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지금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11차례 미사일 도발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었다. 미사일 연습하는 게 서울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라며 “그런데 서울에서는 평양시 발전계획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는 아나” 라며 “옥탑방 체험이 소중했다고 강조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 볼 생각은 없냐” 고 말했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통일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의 ‘천만시민을 모독하는 질의’ 라고 맞받아쳤지만, 서울시민보다 평양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7) 이낙연 국무총리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사퇴의 파편을 맞았다.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의 사퇴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사퇴 시점이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면서 “적어도 12월까지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 안 할 것” 이라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12월 이후에는 사퇴하지 않겠느냐로 읽힌다” 며 재차 묻자, 실장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 고 말했다.

(8) ‘꿀먹은 언어장애인’ 된 국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10월 18일 국책연구원장들을 향해 “꿀 먹은 병어리냐” 며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렇게 비판이 쏟아져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 한마디 없다”며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노력하라. 직을 걸고 하라. 잘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며 주문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불러세워선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니 폐기하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디펜스(방어)를 하라” 고 밝혔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향해선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분양가상환

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학자로서 자신하느냐”며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책연구원은 30년을 가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정부를 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화제를 모은 국정감사장 — 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1)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내지도 않은 공고를 본”

국회 교육위원회의 10월 10일 서울대학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당시 정식 인턴 공고가 없었다는 점과 센터장과 조 장관의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민 씨가)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 과방위의 KIST 국정감사장 “조민 그 조민 아니죠”

KIST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KIST 인턴 기록이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 딸은 당시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날 김경진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질의한 내용 중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이름이 KIST 상징 조형물에 새겨져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 원장에게 다시 질의했다 “그 조민이 그 조민이 아니죠?”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라고 답을 했다.

(3)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2차 국감장 “대통령 기억력 걱정”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즘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며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를 꺼냈다. 이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국무회의에 복지부 장관님도 계셨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진짜 병신 같은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민주당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느냐”고 맞고함을 쳤다. 이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았았네”라면서 “진짜 병신 같은 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 놓고 본인이 더 난리쳐요”라고 말했다. 이말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뉴스 등에 옮겨져 윤리위제소 등으로 확산되었다.

(5) 행안위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탄핵되어야 할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씨’라고 지칭한 것을 놓고 여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할 의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말조심하세요! 야!)” 라고 하였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라고 하며 응수하였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는 이 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6) 행안위의 대구시청 국정감사 “수구도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새마을장학금’ 관련으로 “지난 5년간 대구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000만 원에 달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이해할지언정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로 대구를 상징하라” 며 “대구시장이 광주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맺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 라고 했다. 이에 조원진 공화당 의원은 “대구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이지, 대구시민에 대한 감사냐” 라며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대구시민을 수구꼴통으로 이야기하느냐” 고 강력 반발했다.

(7)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 “무기력감, 박탈감”

10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온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어 인기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대학원생은 조 장관 딸의 특혜입시·장학금 등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의혹들로 인해 무기력감·박탈감 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8)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우기다가 뭐냐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11월 1일 심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간 고성을 동반한 설전으로 막바지에 감사가 파행되었다.

나 원내대표는 북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고 신종 미사일에 탑재된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보시나” 라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우리 방위력을 현격히 개선했다” 고 답하자, 나 원내대표는 “안보실장이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 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 북한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는데 우리의 지금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라며 “전문가가 막을 수 없다고 그런다. 우기지 말라” 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정 실장 뒤편에 자리한 강기정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기는 게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강 수석이 손에 쥔 노란색 책자를 흔들며 격한 어조로 항의를 이어가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불만을 드러내자 결국 회의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운영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진행되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너 이름이 뭐야. 강기정은 국회 밥 좀 먹었다고...이런 싸가지 없이” 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반말 쓰지 마세요” 라고 맞받았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시간여 지나 자정이 임박해 여야 의원들이 장내에 돌아오자 이인영 위원장은 차수를 변경했고, 2일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5. 국정감사장 앞 시위

(1)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시위

10월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서울대 시설관리직 (청소·경비·기계·정비) 노조 시위 탓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조합원 140여 명과 청소·경비분회 조합원 29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 제2 제주공항 저지시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8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격한 항의농성이 벌어졌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이날 아침부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오전 9시30분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청 앞에 도착하자 농성을 하던 시민들은 버스를 둘러싸고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3)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10월 10일 시공사인 금호산업 본사와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단지 허가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 상경한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시공사인 금호산업(서울 종로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정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청송 면봉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청정 청송의 막대한 산림과 생태계 훼손, 그리고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

산권을 위협하고 있다” 고 말했다.

6.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피감기관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직위의 피감기관장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정책점검 차이는 없었지만, 조국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언론의 조명이 달랐다.

피감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일	주요 국정감사 수감내용	인사 청문 보고서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2017-06-23	조국 전장관 집 압수수색 관련 압수수색영장 남발문제	통과
외교부장관 강경화	2017-05-26	지난해 국감에서는 말실수(5.24 해제)로 첫날 파행 북미회담과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방안에 집중 질의를 받음	미채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17-06-02	야당의 수도권 부동산가격인상우려에 대해 과열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응	보고서 채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17-07-06	문케어, 복지정책 조명	보고서채 택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2018-03-06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침	보고서채 택
경찰청장 민갑룡	2018-06-20	검경수사권 독립 등 검찰개혁 실리추구 국감장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참고인으로 등장, 버닝썬 수사 미흡 부담	보고서채 택
국가인권위 위원장 최영애	2018-07-23	지난해 코드인사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번에는 아직 미실시	보고서채 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2018-09-03	조국 딸 문제로 입시제도개혁 모색	미채택
국방부장관 정경두	2018-09-03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고 해 야당으로부터 북한의 대변인이란 말을 들	보고서채 택

피감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일	주요 국정감사 수감내용	인사 청문 보고서
		음 군사법원에서 내년 총선 출마여부가 질의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018-09-03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곤욕	보고서 채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2018-09-03	버티는 이재갑 장관 “52시간제 보완책보다 국회 입법이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논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10월 중으로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입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	보고서 채택
합동참모의장 박한기	2018-09-21	일본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	보고서 채택
환경부장관 조명래	2018-10-10	자원순환정책 쓰레기산 질타 ASF 초기판단 잘못(북한 영향에 부정적)	미채택
한국방송공사 사장 양승동	2018-11-05	‘KBS 근조’,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등의 피켓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시청료 납부거부운동, 기자성추행 대책 추궁당함	미채택
부총리 겸 기재장관 홍남기	2018-11-16	“성장률 목표 달성 어렵다” 공식화 “법인세율 개편 계획없다… 내리면 세수 결손 우려”	보고서 채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2019-03-13	토쿄올림픽에 참여할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	보고서 채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2019-03-13	내년 주 52일근무제에 대해 회의적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소회를 밝힐 정도로 자신감 피력 “위원님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의 지적이 앞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맺음	미채택
통일부장관 김연철	2019-03-13	남북관계 경색, 월드컵예선 남북축구경기 미중계 등으로 질타를 많이 받음	미채택

피감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일	주요 국정감사 수감내용	인사 청문 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2019-03-13	함박도 영토 논란에 대해 공방	보고서채 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19-03-13	해운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 나, 권력실세 친인척 지원 관련 집중 추궁을 받음	보고서채 택
국세청장 김현준	2019-06-03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 총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	보고서채 택
검찰총장 윤석열	2019-06-20	대검 국정감사에서 인사청문회때와 달 리 야당의 격려와 여당의 검찰개혁 주 문을 무리없이 받았다는 평가	미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2019-08-14	5G 진흥책과 혁신성장 방안 등	미채택
법무부장관 조국	2019-08-14	법무부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15일 하루전인 10월 14일 사퇴함	미채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2019-08-14	ASF 대응책 미흡으로 질타를 받았고, 5월 북한 발병 소식 때 제대로 대처했 어야 한다는 양당으로부터 혼쭐	보고서채 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2019-08-14	아직 실시되지 않음 (10.23)	미채택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2019-08-14	공정위 내부 인사 계획부터 일감 몰아 주기 규제, 플랫폼 사업자, 가맹사업 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차분이 답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문제로 파문을 일었으나 올해에는 없 었음	미채택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2019-08-14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 행장에 대해 책임질 일 사안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견해	미채택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2019-08-1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보이 콧한다는 의미로 의자를 돌려앉음	미채택

IV. 제20대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국정감사 전반(全般)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심의 등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 집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민병두 정부위원장의 2019. 10. 2. 국무조정실 등 국감 개의발언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국감이 되지 않도록 여야 간에, 마지막에 원내대표들 간에 아니면 여당 내에서도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증인체택에 여당이 좀 더 노력해 주셔야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고 정말 역사에 남을 짧은 국감에, 맹탕 국감에, 방탄 국감이 될 것으로…… 우리 여야 모두가 정말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양석 국회운영위 간사, 제371회 국회운영 제1차(2019년9월26일)

1. 2019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조정 등

2019년 9월 26일 제371회 정교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국정감사 정교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³⁾”이 의결되었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에 의해 2019. 10. 2.부터 10. 21.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5일과 11. 1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10월 23일 감사와 24일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다.

2. 2019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8선인 최다선 무소속 서청원 국방위원회 위원 등 296명이었으나(2019년 10월 10일 주미대사가 된 이수혁 국회의원이 사퇴하여 하루동안 295명이었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정교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정교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국정감사를 정교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임.

다가 10월 11일 정은혜 의원이 의원직 승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임이 됨), 국무위원을 겸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의원의 불출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희의원이 5일 청가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4.5일 청가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불출석은 보이지 않았다. (2018년도에는 정무위 정재호 의원은 시찰 제외 10일 불참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10일과 겸임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 1일 불참하였음)

상임위원회별로 국토교통위원회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같이 새로 생긴 교육위원회가 16명으로 가장 적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정원은 17명이었으나, 올해 현원은 16명이었음)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128명(지난해 129명)으로 43.1%, 자유한국당 110명(지난해 112명)으로 37.0%였고, 바른미래당 28명(지난해 30명)으로 9.4%, 비교섭단체는 31명(지난해 27명,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30명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 10.5%였다.

《2019년도 국정감사시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현황》

2019년 10월2일 기준

교섭단체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율(%)
더불어민주당		115	13	128	43.1
자유한국당		93	17	110	37.0
바른미래당		15	13	28	9.4
비교섭단체		27	4	31	10.5
계		250	47	297	100

(무소속 국회의장포함)

3. 2019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8개

2019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19년 10월 1일 제37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9월 25일과 9월 26일, 10월 1일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승인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7개(정부·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 기관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전체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대상 기관은 총 753개 기관이었음》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81개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0개였다. 가장 적은 위원회는 28개 기관을 선정한 기획재정위원회였고, 그 다음 국토교통위원회로 29개 기관이었다(겸임위 제외).

4. 69회나 5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국감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도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일정 중 무려 69회(2018년도 58회, 2017년도 44회)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렇게 5개 기관이상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은 피감기관이 576개로 전체 피감기관 748개(정보위 제외함) 중 77%에 달했다.

국방위의 경우에는 하루에 28개(지난해 32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체일정 중 20개 이상 감사를 한 경우도 6일이나 되어 중요 피감기관이 아닌 개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2019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법제사법위 원회	대법원	6	19.10. 2.(수)	대법원	10:05	20:09	10:04
교육위원회	교육부	7	19.10. 2.(수)	국회	10:07	23:25	13:18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1	19.10. 2.(수)	국회	10:07	23:19	13:12
국방위원회	국방부	28	19.10. 2.(수)	국방부(서울)	10:07	21:18	11:11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14	19.10. 2.(수)	국회	10:07	17:21	7:14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부	7	19.10. 2.(수)	국회	10:07	23:19	13:12
환경노동위 원회	환경부	7	19.10. 2.(수)	환경부 (세종)	10:05	20:33	10:28
교육위원회	한국사학진흥 재단	12	19.10. 4.(금)	국회	10:06	19:26	9:20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 관	22	19.10. 4.(금)	국회	10:04	17:19	7:15
법제사법위 원회	서울고등검찰 청	11	19.10. 7.(월)	서울고등 검찰청	10:06	22:28	12:22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위원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5	19.10. 7.(월)	국회	10:03	22:20	12:17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문화재청	13	19.10. 7.(월)	국회	10:03	18:12	8:09
보건복지위 원회	식품의약품안 전처	7	19.10. 7.(월)	국회	10:00	19:51	9:51
환경노동위 원회	기상청	17	19.10. 7.(월)	국회	10:03	18:53	8:50
국토교통위 원회	한국철도공사	8	19.10. 7.(월)	철도공동 사옥	10:04	19:44	9:40
법제사법위 원회	대전고등법원	10	19.10. 8.(화)	대전고등 법원	10:18	12:51	2:33
법제사법위 원회	대전고등검찰 청	7	19.10. 8.(화)	대전고등 검찰청	14:31	18:09	3:38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8	19.10. 8.(화)	합동참모 본부	10:14	20:48	10:34
보건복지위 원회	국립암센터	6	19.10. 8.(화)	국회	10:00	18:28	8:28
환경노동위 원회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7	19.10. 8.(화)	국회	10:00	18:43	8:43
정부위원회	국민권익위원 회	5	19.10.10.(목)	정부세종 청사	10:00	18:25	8:25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1	19.10.10.(목)	서울대학 교	10:04	20:31	10:27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연구재단	27	19.10.10.(목)	국회	10:03	22:12	12:09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5	19.10.10.(목)	해군본부	10:02	13:15	3:13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5	19.10.10.(목)	공군본부	15:13	18:28	3:15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9	19.10.10.(목)	국회	10:04	17:45	7:41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6	19.10.10.(목)	국회	10:03	18:33	8:3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위원회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1	19.10.10.(목)	국회	10:10	20:21	10:11
환경노동위 원회	한강유역환경 청	12	19.10.10.(목)	국회	10:02	19:57	9:55
법제사법위 원회	대구고등법원	9	19.10.11.(금)	대구고등 법원	10:17	12:58	2:41
법제사법위 원회	대구고등검찰 청	6	19.10.11.(금)	대구고등 검찰청	15:02	18:22	3:2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위원회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26	19.10.11.(금)	국회	10:06	21:57	11:51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10	19.10.11.(금)	육군본부	10:05	15:47	5:42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위원회	해양경찰청	5	19.10.11.(금)	국회	10:04	17:45	7:41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8	19.10.11.(금)	국회	10:30	20:21	9:51
환경노동위 원회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6	19.10.11.(금)	국회	10:00	19:28	9:28
법제사법위 원회	서울고등법원	16	19.10.14.(월)	서울고등 법원	10:02	19:04	9:02
기획재정위 원회	한국수출입은 행	5	19.10.14.(월)	국회	10:03	19:08	9:05
교육위원회	충남대학교	10	19.10.14.(월)	대전교육 청	10:11	12:45	2:34
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11	19.10.14.(월)	경북교육 청	10:14	12:45	2:31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대한체육회	5	19.10.14.(월)	국회	10:15	17:44	7:29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 력	9	19.10.14.(월)	국회	10:06	20:15	10:09
환경노동위 원회	한국수자원공 사	11	19.10.14.(월)	국회	10:03	18:55	8:52
국토교통위 원회	한국감정원	7	19.10.14.(월)	국회	10:07	23:03	12:56
법제사법위 원회	법무부	5	19.10.15.(화)	국회	10:35	19:31	8:56
교육위원회	전남대학교	12	19.10.15.(화)	전남대학 교	10:04	13:02	2:58
교육위원회	경상대학교	11	19.10.15.(화)	경상대학 교	10:01	12:49	2:48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5	19.10.15.(화)	국회	10:03	21:46	11:43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13	19.10.15.(화)	국회	10:08	20:34	10:26
보건복지위 원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0	19.10.15.(화)	국회	10:00	17:55	7:55
환경노동위 원회	근로복지공단	7	19.10.15.(화)	국회	10:00	18:29	8:29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2	19.10.16.(수)	국회	10:36	20:19	9:43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기획재정위 원회	대전지방국세 청	7	19.10.17.(목)	대전지방 국세청	10:02	12:23	2:21
기획재정위 원회	부산지방국세 청	5	19.10.17.(목)	부산본부 세관	15:29	17:51	2:22
행정안전위 원회	공무원연금공 단	10	19.10.17.(목)	국회	10:05	17:47	7:42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 흥원	12	19.10.17.(목)	국회	10:03	17:20	7:17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위원회	한국마사회	6	19.10.17.(목)	국회	10:03	19:03	9:00
보건복지위 원회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10	19.10.17.(목)	국회	10:01	17:41	7:40
정부위원회	국무조정실	6	19.10.18.(금)	국회	10:01	21:00	10:59
외교통일위 원회	한국국제협력 단	6	19.10.18.(금)	국회	10:04	18:48	8:44
법제사법위 원회	법무부	5	19.10.21.(월)	국회	10:15	20:24	10:09
정부위원회	금융위원회	8	19.10.21.(월)	국회	10:02	20:10	10:08
외교통일위 원회	외교부	9	19.10.21.(월)	국회	10:15	22:43	12:28
국방위원회	국방부	7	19.10.21.(월)	국회	10:10	21:06	10:56
기획재정위 원회	기획재정부	5	19.10.23.(수)	국회	10:03	22:52	12:49
여성가족위 원회	여성가족부	6	19.10.23.(수)	국회	10:05	19:06	9:01
기획재정위 원회	기획재정부	7	19.10.24.(목)	국회	10:04	21:27	11:23
행정안전위 원회	행정안전부	5	19.10.24.(목)	국회	10:03	19:37	9:34
국회운영위 원회	국가인권위원 회	6	19.10.25.(금)	국회	10:04	23:50	13:46

《2018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일시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6	2018.10. 10.	10:07	22:34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	2018.10. 10.	10:06	00:16 (익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5	2018.10. 10.	10:03	23:31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32	2018.10. 10.	10:33	21:08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12	2018.10. 10.	10:04	19:3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	2018.10. 10.	10:09	23:26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7	2018.10. 11.	10:17	23:08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24	2018.10. 11.	10:02	18:4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5	2018.10. 12.	10:11	22:41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일시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교육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의회 등	12	2018.10. 12.	10:07	19:18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	2018.10. 12.	10:05	19:01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7	2018.10. 12.	10:05	21:09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	2018.10. 15.	10:03	18:57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등	9	2018.10. 15.	10:01	18:03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13	2018.10. 15.	10:08	22:04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	2018.10. 15.	10:01	23:04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등	16	2018.10. 15.	10:00	18:30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등	9	2018.10. 16.	10:08	13:01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검찰청 등	6	2018.10. 16.	14:31	18:33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5	2018.10. 16.	10:05	20:05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5	2018.10. 16.	10:10	23:10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	2018.10. 16.	10:11	23:19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문화재청 등	19	2018.10. 16.	10:02	17:59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6	2018.10. 16.	10:01	18:57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8	2018.10. 16.	10:07	22:02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	2018.10. 16.	10:00	18:54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6	2018.10. 17.	10:04	18:36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14	2018.10. 18.	10:06	22:20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 회등	23	2018.10. 18.	10:02	19:24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등	10	2018.10. 18.	10:02	16:28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	2018.10. 18.	10:07	18:12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5	2018.10. 18.	10:02	18:2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9	2018.10. 18.	10:08	22:56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등	12	2018.10. 18.	10:00	18:5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6	2018.10. 18.	10:04	21:09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018.10. 19.	10:10	21:38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8	2018.10. 19.	10:04	17:54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등	7	2018.10. 19.	10:10	12:53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등	5	2018.10. 19.	14:23	17:29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2018.10. 19.	10:02	18:30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일시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등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	2018.10. 22.	10:06	21:37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5	2018.10. 22	10:02	18:5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등	11	2018.10. 22.	10:06	22:42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10	2018.10. 22.	10:03	20:03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10	2018.10. 23.	10:16	13:18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	7	2018.10. 23.	14:59	18:09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등	5	2018.10. 23.	15:15	17:28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7	2018.10. 23.	10:06	18:54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26	2018.10. 23.	10:01	19:02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대한체육회 등	5	2018.10. 23.	10:00	18:4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	2018.10. 23.	10:03	19:47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6	2018.10. 23	10:01	17:5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8	2018.10. 24.	10:11	20:18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등	20	2018.10. 25.	10:03	19:0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등	8	2018.10. 25.	10:03	19:1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7	2018.10. 25.	10:00	20:59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6	2018.10. 30.	10:04	19:11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5	2018.11. 07.	10:08	18:30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 생중계

감사시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
통부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 10월 4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0월 23일과 2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
13회(2018년도는 14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다. 10월 3일 법사위의 대
법원 국정감사 녹화중계,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녹화중계. 국방위

의 국방부 국정감사 녹화중계 등을 시작으로 법정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등을 비롯해 평일 새벽 시간대에 중계방송을 하였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20개(겸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67개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대부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152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거의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다만 영상회의록과 달리 속기록인 회의록이 너무 늦게 올라와 2019. 12. 1. 현재에도 전체 국정감사(시찰 제외) 50%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6. 2019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은 1314시간 04분

2019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은 1314시간 4분으로 지난해 1447시간 44분보다 많이 저조하였다. 휴식시간을 제외한 감사활동 시간은 948시간 37분에 불과하였다.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고, 2016년도 1216시간 43분이었으므로 국정감사 시간에 있어서는 3번째 많은 시간이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788개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적은 시간이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4:04	문화체육관광	55:18
법제사법	97: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4:1
정무	84:3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111:4
기획재정	92:36	보건복지	85:57
교육	59:12	환경노동	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9:5	국토교통	110:33
외교통일	92:24	정보	16:56
국방	57:45	여성가족	9:01
행정안전	112:42	계	1314:04

《2018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	위원회	감사시간
법제사법	117:4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0:50
정무	99:5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4:14
기획재정	11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24:03
교육	83:50	보건복지	106: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2:20	환경노동	100:13
외교통일	93:31	국토교통	102:02
국방	61:42	여성가족	9:07
행정안전	137:48	국회운영	22:27
		계	1447:44

7.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장의 말이 회자되어 경각심을 주거나 이슈화되기도 하였는데 2019년도에도 매일 매일 국정감사 말, 말, 말 형태로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있었던 촌철살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김종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내가 조국이야!’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어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 주었

다.

《2019년도 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조합)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02일	윤상직 의원	저 정도의 논란이 있으면 꼭 장관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생기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부 국정감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질문
10월 02일	이찬열 위원장	중학교는 괜찮습니까	교육부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입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
10월 02일	박찬대 위원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	교육부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나 원내대표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에서 논문 포스터를 써 진학 스펙을 채웠다고 주장
10월 02일	이종배 의원	지난 7월 1일 일본 규제, 도대체 언제 알고 있었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그동안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며 발언을 하였다.
10월 2일	성일중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지적
10월 2일	이정현 의원	우리 외교가 북한 중심 외교, 북한 올인 외교, 총선용 외교에서 비롯된 외교 실종상태라고 단정하고 싶다	외교부 등 국정감사	‘외교부 패싱’ 논란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질의
10월 2일	이장우 의원	조국 같은 편협하고 정치권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로 꽉 채웠다	환경부 국정감사	4대강 보 처리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지적
10월 2일	김학용 위원장	참고로 저도 샤프란 애용자다	환경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LG생활과학 전무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10월 4일	김승희 의원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을 잘 챙기셔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관련 질의
10월4일	김성원 의원	지금 홍길동식 답변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지적
10월 4일	홍남기 장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집중해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대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모자랄 판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집회가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규모 집회에 대한 생각을 묻자
10월 4일	민정욱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로, 청년들은 LH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누구의 동생, 처제, 아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쉽게 입사해 정규직이 됐다	LH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에게 친인척 채용 비리를 지적
10월 04일	추경호 의원	왜 물타기 하려고 하시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증세 정책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홍 부총리에게 한 말로 당연한 경제학 원론을 얘기하는 부총리에게 한 말이다.
10월 4일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장	조민 씨는 자신이 열심히 해서 제1저자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떡하나.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 분야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답변
10월 4일	송희경 의원	정부가 작곡하면 여당이 편곡, 언론사 방송사가 연주한다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정부와 여당이 자신에 불리한 정보만 가짜뉴스로 규정한다는 점을 비판
10월 7일	한정애 의원	기상청이냐, 이벤트 회사냐	기상청 국정감사	기상청이 스마트폰 날씨 제보 앱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이벤트 비용으로 약 2천300만 원을 썼다면
10월 07일	김종민 의원	내가 조국이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여야의 조국 대전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을 때 김도읍 의원의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는 지적에 반박하며
10월 07일	이만희 의원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진청이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소속 공무원 등에게 대부분 주의·경고조치만 취한 것을 지적
10월 7일	박완수 의원	이것은 소방청장 행복정책이지, 소방관 행복정책은 아니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소방 홍보와 관련한 유튜브 채널 구독을 소방관들에게 강요했다면서
10월 7일	장제원 의원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10월 7일	임태섭 변호사	환자들을 데리고 생체실험한 것과 다름없다	식약청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국내에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비판
10월 8일	김성원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의원	인테 지금 금융감독원은 ‘뽕 깃’을 하고 있다. 자기 혼자 모른 척하고 있다	국정감사	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비판
10월 8일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잊힌 아이 같습니다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국립의료원 부지 이전이 16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답하며
10월 8일	김순례 의원	국립암센터가 (연구자의) 자녀들 논문 실적 만드는 제조공장입니까? 특혜받은 자식들 때문에 서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국립암센터 재직 연구원들의 자녀 논문 특혜 의혹을 질타
10월 8일	김순례 의원	대통령 아들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 모르세요? TV도 언론도 안 보고 일만 하세요?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질의
10월10일	전희경 의원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다	서울대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을 비판
10월 10일	박완주 의원	(국내 김이)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산업계의 반도체다	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	이 수출 효자상품이라고 강조한 뒤 김 양식장의 불법 염산 사용이 늘고 있어 정부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10월 10일	윤상직 의원	처음부터 연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했다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이 ‘신진 교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10월11일	윤후덕 의원	문재인 정부 통계청을 보면 안쓰럽다. 자존심이 상한다	통계청 등 국 정감사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박
10월 11일	여환섭 대구지검장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 번호는 없었다	대구고검등 국 정감사	과거 ‘김학의 의혹’ 특별수사 단장을 맡았을 당시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내용은 없었다
10월 11일	송희경 의원	대학에 입학하려 하는 아이들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대입 전형이 유행이라고 한다. 부모님들은 ‘조못미’, 즉 ‘조국처럼 못해서 미안해’라는 자조가 섞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과학기술연구 회 등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을 언급
10월 11일	김동철 의원	이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민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다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등 국 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경기도 주요 노동정책 18개 과제를 비판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1일	오거돈 부산시장	돼지국밥집을 하더라도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식자재가 어떻게 되는지 다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 국정감사	과거 지방 정부에서 하던 정 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를 따져 묻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10월 11일	강효상 의원	마원은 자기 아파트에서 24시간 근무해서 알리바 바를 만들었는데 52시간 적용해서 세계적 기업이 나오겠느냐	지방고용노동 청 국정감사	주 52시간 근무제의 제도기간 을 연장해야 한다며
10월 11일	추경호 의원	쓴 소리가 되더라도 경 청해 주길 바란다.	관세청 국정감사	관피아라고 불리는 관세청 퇴직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관세청을 비판하
10월 11일	김성식 의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 다...	관세청 국정감사	관세청이 4세대 국가종합정 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기 관세심사대상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
10월 11일	이종배 의원	정권 입맛 맞춘 무리한 코드경영	한국전력 국정감사	한전 현안을 해결해줄 것이 라고 믿었지만 경영이 악화되 고 무리한 코드 경영과 친정 부 인사를 임명하고 한정공대 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실 망스러운 행보에 대한 질타
10월 11일	이철희 의원	일부 판사는 자신을 신 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고법 등 국정감사	법원노조가 판사의 갑질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법원장의 조치, 내부 지침등을 요구
10월 11일	주광덕 의원	사법의 수치다	대구고법 등 국정감사	유방암 투병 중인 김경숙 교 수도 실형을 살았는데, 허리디 스크 수술을 해야한다는 조모 씨가 전혀 아파보이지도 않고 중범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 에서 조 장관 동생만 영장기 각이 된 것을 문제를 비판
10월 11일	장제원 의원	법원 건물이 많이 낡았 다	대구고법 등 국정감사	준공한 지 46년이 된 대구고 법의 노후를 언급.
10월 14일	장제원 의원	명재권 판사가 직접 나와 서 조권이 0.0114%의 남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보 여야 한다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부터 내린 1만7천여건의 영장 판결 중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 된 사례가 2건뿐이었다고 지 적
10월 14일	여상규 법사위 원장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 증을 남기고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퇴임하신다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오후 국감 개의를 앞두고 조 국 장관의 사의 소식을 전하 며
10월 14일	이언주 의원	이게 사회주의야!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가 제로페이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
10월 14일	조원진	박 시장과 당신은 꼭 법	서울시 국정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의원	정에 세울 거예요	사	거과정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지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을 언급하면서
10월 14일	우원식 의원	미숙했던 것이 아니라 위법이다	한국 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	한국서부발전의 비정규직 관리 실태와 관련 ‘업무가 미숙했다’는 김병숙 사장의 답변을 비판하며
10월 14일	박대출 의원	‘딱국장’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딱 보니 100만’이라는 뜻으로 MBC에서는 (보도국장을) 딱국장이라 부른다고 하더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박성제 MBC 보도국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에 대해 “딱 보니 100만(명)짜리”라고 말한 것을 두고
10월 14일	박대출 의원	오늘 조국 장관이 드디어 사퇴했다. 처음부터 입어선 안 될 옷이었다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MBC도 마찬가지로 옷을 다 벗고 내려놔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10월 14일	박완주 의원	제 페이스북을 오가는 사람보다 푸른장터 오가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산림청 등 국정감사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일일접속자수가 너무 낮은 것을 꼬집으며
10월 14일	이만희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교훈을 얻은 게 없으십니까?	산림청 등 국정감사	산지를 보전해야 하는 산림청만큼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
10월 15일	박성중 의원	(앞이) 안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AR(증강현실) 고글’을 쓴 상태로 질의
10월 15일	윤후덕 의원	오늘은 하나도 없네요. 다 행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국정감사	전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빗발쳤지만 이날은 없다고 언급하며
10월 15일	김동철 의원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	한국고용정보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비판
10월 15일	박용진 의원	‘아빠 찬스’도 아니고 ‘삼촌 찬스’를 넘어서 ‘남친 아빠 찬스’까지 가면 심각하다고 본다	전남대 등 국정감사	전남대병원 고위직의 아들, 조카, 아들 여자친구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
10월 15일	김성식 의원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세무조사의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10월 15일	김성식 의원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왔다고 지적
10월 15일	김성원 의원	조국 일가가 범죄 혐의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	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동조한 것이다		
10월 15일	김선동 의원	조국은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조국 일가의 옹동학원은 비자금의 옹덩이라고 생각하는 의혹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기가 비자금의 몸통이고 옹덩이다	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	자산관리공사가 옹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0월 15일	이종배 의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고 종합 백화점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안전사고와 성희롱, 성추행 등 기강 해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
10월 17일	박대출 의원	KBS가 보도 참사, 명예 참사, 그리고 경영 참사, ‘3대 참사’를 당하고 있다	KBS 등 국정 감사	“KBS의 정권 맞춤형 편파 보도가 도를 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고 지적
10월 17일	정진석 의원	‘KBS 시사토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하는데 왜 불쑥불쑥 들어와	민주평통 등 국정감사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10월 17일	백승주 의원	제2작전사령부는 관리 사령부다.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사령부가 아니라 관리사령부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0월 17일	이주영 의원	가용장비를 통해 드론을 탐지한 적이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	대응 무기와 방안이 없어 우리나라의 안보가 뚫리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
10월 17일	심재철 의원	소신없고 배짱도 없다	대구지방국세 청 국정감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산업계의 고난에 대해서 물은 질문에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이 할 말이 없다고 하자 소신없고 배짱도 없다고 질타
10월 18일	김학용 위원장	남쪽 돼지는 남쪽에만 살고 북쪽 돼지는 북쪽에만 사는가? 해엄쳐 와서 놀다가 다시 간다는 것 아닌가	환경부 종합감사	환경부의 멧돼지 방역 초기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
10월 18일	이종배 의원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천국이 되기 위해 지옥행 탈원전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산업통상자원 부 종합감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
10월 21일	이종명 의원	국가대표 선수가 피땀 흘리면서 샌드백 치는 것과 조폭이 선량한 국민 앞에서 ‘팡!’하고 벽을 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나	국방부 등 중 합감사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대북 안보태세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
10월 21일	이양수 의원	변두리 취급받고 있어요.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어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 정책적 지원분야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2018년도 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조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화자	말	배경/이유
10.10	기재위	국세청	유승희	남(男)세청으로 불러야겠다.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세청 간부진을 보며 여성간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냐며 비판하면서
10.10	기재위	국세청	나경원	바른생활 어린이처럼 답변하시는 데요	재량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심에 한승희 국세청장의 답변을 비판하며
10.10	문체위	문체부	손혜원	아시안게임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우승이라고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야구대표팀의 선수 선발 과정을 비판하던 중
10.10	농축산위	농식품부	정운천	국회의원이 기업에 갑질한다는데, 이게 갑질이라 한다면 (기꺼이 갑질)하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5대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질책하면서 한 말
10.10	농축산위	농식품부	김정재	갑질이 아니라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파악한 거 같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꺼리는 5대 대기업의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언론 매체의 지적이 없었다면서 꺼낸 말
10.11	기재위	관세청	박영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 협회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으면서, 이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
10.11	교육위	교육부	박용진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고발하며 폭로
10.11	외교위	통일부	이정현	지도층 세력에 반평화 반통일 세력이라니	5.24 조치를 해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경우 반통일 반평화 세력으로 몰린다고 발끈하면서
10.11	외교위	통일부	유기준	100도 비등점에 달한 물을 요구	외부에서 볼 때 사찰 허용하고 폐기까지 일련의 스케줄이 나와야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물을 끓이는 과정을 계속 설명하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화자	말	배경/이유
					지적하며
10.16	국토위	충북도	이현재	유감스럽다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면서
10.19	기재위	기재부	심상정	종부세에 콤플렉스 있으세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종부세 콤플렉스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10.19	국방위	해군본부	하태경	장군님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될 수 있다는 경고통신을 하라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인정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하던 중 발언
10.22	법사위	감사원	박지원	지금까지 감사원이 해온 결과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4차례나 했지만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하면서
10.22	법사위	감사원	장제원	감사원을 보고 있으면 김수희 선생의 ‘애모’가 생각나요. 왜 그렇게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10.22	과방위	과기연 등	최연혜	커피믹스인가..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비판하면서
10.23	기재위	대구지방국세청 등	유승희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일용직과 가사도우미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10.23	행안위	충북도	유민봉	제천에 가서 참 양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를 만난 소감을 밝히면서
10.25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나경원	통계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비판하며
10.25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추경호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10.25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심상정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한 발언
10.25	농축산위	수협중앙회 등	박완주	스스로 능력없다고 하는 기관은 처음봤네	“능력이 부족해 종자방류 인증제도를 확대하지 못한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화자	말	배경/이유
					다”고 답변한 신현석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비판하며
10.25	농 축 산 위	수 협 중 앙 회 등	정운천	여기보면 풍력발전회사 같아요	수협중앙회 누리집 배경화면이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풍력발전을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0.26	농 축 산 위	중 합 국 정 감사	정운천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고 수협은 경제사업을 모두 적자로 끌어가면서 어업인들은 뒷전이고 산림청은 산림조합과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싸우기만 한다.	종합국감에서 농협, 수협, 산림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하며
10.29	외통위	통일부	정진석	리선권 위원장이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소위 ‘목구멍’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10.29	교육위	중 합 국 정 감사	박용진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걸 보니 한유총의 ‘유’는 어린이가 아니라 기름 유(油)같다.	한유총에 대한 비리자료를 보고 국민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데, 한유총은 정작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을 비꼬며
11.06	운영위	대 통 령 비 서실등	임종석 (비서실장)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답하며

《2017년도 감사위원의 한마디 말씀》

(언론보도내용 조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10.12	국방위	국방부 등	김학용	야구팀이 10명인데 방망이, 글러브 4년 후에 주겠다는 것, 어떻게 필수 전력 확보할거냐	부대개편의 사업의 핵심장비 등 필수 전력화 사업 46개 중 40개가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0.12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섭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외국에서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하라면 얘기가 되느냐	도 한국 원전을 최고 기술로 인정하는 마당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10.12	외통위	외교부 등	박주선	미국과의 외교는 외화내빈,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는 설상가상. 일본과의 외교는 기대무산.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는 유명무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4강외교 성과를 폄평하며
10.13	국방위	방위사업청 등	이철희	장관의 직접 지시로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합참이 소요 결정을 한다. 기록적 시간	지난 2014년 우리 군이 도입한 주한미군의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졸속 구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10.16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등	김학용	참수부대가 참수시키려 갔다가 참수당할 우려가 많다	참수작전 핵심부대인 특전사 총 64개 팀 가운데 50여개 팀의 통신 상태가 먹통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이진복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이 직원 수와 점포 수 줄이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성원	너무 한쪽만 제기되면 의혹이 사실처럼 된다	케이뱅크 인가 문제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지적을 쏟아내자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종석	이 사람이 개인 재산 7000만원을 날릴만큼 잘못했나? 이 사람 장가 가려는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 규제' 부작용 사례로써 투기지역 지정으로 위약금 7000만원을 물게 된 30대 시민의 사례를 들면서
10.16	법사위	법무부	노희찬	제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법무부 국감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10.16	법사위	법무부	박지원	지금까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안으로 나와가지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	법무부 국감에서 공수처안이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10.17	행안위	서울특별시	장제원	정신이 나갔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강탈”했다고 비판하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김종석	금감원의 영문명이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서비스’다. 규제 청이 아니라	감독행정의 목적은 피감독자의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지 피감독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김혜영	지금 거기 앓아계시는 부원장 이하 분들은 전부 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계속되는 취업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사규정 개정엔 나서지 않은 금감원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정재호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에 의한 신분사회다	사회에 갓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미리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0.18	환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등	한정애	(피해자가) 오늘은 점심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가해자가) 너 라고 얘기했다	성희롱 사건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성희롱 사건 질타
10.19	행안위	경기도	백재현	경기도 국감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하루 종일 질의에서 남 지사의 청년정책과 이 시장의 청년 배당정책이 비교 거론되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아예 이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와 은행장으로 있는 주빌리 은행 관련 질의를 하자
10.20	농해수위	농협	이만희	무엇이 농민을 위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농민들의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10.23	국방위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학용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육군 2작전사의 장비가 전방1·3군에서 수명이 다한 물자를 전환배치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10.23	국방위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중로	공관과 관사가 크고 궁궐같이 지어진 것은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게 대지 8200평·건평 160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관의 효율적 이용을 촉구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박지원	반려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순 없는 노릇 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지만 주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검찰청 등		넙니까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정성호	기업이 100마일로 움직 이면 법은 1마일로 움직 인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에게 미 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의 말을 인용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박지원	오동요이 떨어졌으면 가 을이 온 것을 알 듯 우 병우가 떨어지면 노승권 지검장도 떨어져야 한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의 우병 우 사단 의혹에 대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지적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정성호	법원이 제일 못하고 있 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한 영장 기각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 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노회찬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경우가 많은 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 미에서 질의하겠다	소년 사건을 8년간 전담해 온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 호 부산가정법원 판사에게 감사하다며
10.26	농 해 수 위	수협	이양수	어업인을 위한 은행이 나, 일반인·기업인을 위 한 은행이나	수협은행장에게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고 하라고 주문하며
10.30	환노위	환경부, 기상청	강병원	전어 낚새를 맡으신 것 도 아닐 텐데 자유한국 당 의원님들께서 복귀해 주셨다	국감 보이콧 철회를 선언한 뒤 국감장으로 복귀한 자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10.31	국방위	국방부 등 중 합감사	김중로	국민이 불안해 하니 문 정인 특보와 술 한잔 하 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통 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간에 자꾸 엇박자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스는 누구겁니까?’ 가 회자되어 유행어가 됨

8.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3개위원회 12회 실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경기도 - 이재명 개인의혹사건 이슈

이번 국정감사에서 2번 이상 국정감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서울시와 제주자치시였다. 경기도의 경우 2번 계획되어 있었으나, 환경노동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되었다.

예년과 같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반대 시위가 여기 저기 있었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축소 목소리도 높았지만, 매년 지방교부금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통제가 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보다는 지자체장 관련 질의가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도마 위에 올라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제2제주공항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장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

《2019년도 지자체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반	일자	지자체명	지자체장	주요내용	특이사항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1반	2019.10.10	대구광역시	권영진	1.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2.공공기관낙하산인사 3.대구취수원이전해결 4.대구시신청사건립 5.일자리안전및질문제 6.청년층의탈대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구 시민들을 수구로 지칭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감.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	2019.10.10	전라남도	김영록	1.블루이코노미사업과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 2.농어민수당지급대상 3.한전 공대 설립 4.진도해양쓰레기행사 5.각종지표와기관경고문제 제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지정 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1반	2019.10.11	부산광역시	오거돈	1.동남권관문공항(김해신공항문제) 2.부산시장에대한특혜의혹이가짜뉴스임 3.노환중부산의료원장조국 딸특혜장학금문제,임명과정의혹 4.유재수경제부시장비리감찰무마의혹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	2019-10-11	전라북도	송하진	1.새만금태양광에너지사업 취소공방 2.전주특례시지정문제 3.전국최악의미세먼지수준과부실한저감대책	
행정안전위원회		2019-10-14	서울특별시	박원순	1.박원순시장아들병역비리 문제제기 2.제로페이혈세공방 3.서울시교통공사친인척 채용의혹 4.대기질문제 5.조국편드의혹 6.공공자전거따릉이의적자 운영 7.서울시와이파이사업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1반	2019-10-15	충청남도	양승조	1.강력범죄특정대상및지역 편중,치안유지	

					2.미세먼지문제에따른충청권노후화력발전소존폐문제 3.계룡군문화엑스포북한군참여 4.도산하기관부정채용 5.4대강보해체에따른갈등 6.공공기관종합청렴도전국최하위 7.충청지역지하수방사능오염문제 8.혁신도시지정문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	2019-10-15	인천광역시	박남춘	1.붉은수돗물사태(책임소재, 재발방지대책, 수사상황, 초동대처부족질타) 2.인천e음카드부익부빈익빈문제 3.주민참여예산제 4.인천지하상가조례개정상위법논란 5.아프리카돼지열병(ASF)사태	
행정안전위원회	통합	2019-10-18	경기도청	이재명	1.경기소방개인신상정보유출 2.닥터헬기문제 3.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 4.체납관리단운영 5.청년기본소득	이재명정책검증보다현실적인어려움이더부각됨. 이재명경기지사제소현황자료제출문제로본질의전공방조국비호, 구명운동등개인적질의이어짐 이재명자격논란으로파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합	2019-10-15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1.농산물해상운송비국비지원 2.농가부채급증 3.풍수해피해농민에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개선의필요성 4.지하수보전 5.가축분뇨처리실태 6.1차산업지원 7.아프리카돼지열병 8.신항만개발사업에대한도의관심요청	
국토교통위원회	지방 1반	2019-10-08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1.제주제2공항건설사업,공론화요구(공항민영화, 군사공항활용가능성우려, 입지선정과정의주민소통부재) 2.난개발,쓰레기문제	1.제주제2공항건설에대한찬반집회가있었음. 2.제18호태풍차바로인한피해복구현장방문위해국정감사를일찍마무리하고피해상황을청취

						함.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 2반	2019-10 -08	대전광역시, 세종 특별자치 시	허태정 대 전시장, 이춘희 세 종시장	1.대전시트램(서대전육교지 하화) 2.대전혁신도시지정 3.세종시인구분산실패문제 제기 4.세종보철거	
국토교통 위원회	통합	2019-10 -17	서울특별 시	박원순	1.서울교통공사채용비리의 혹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 2.역세권청년주택실효성의 문제기	1.채용비리의혹에 대해윤호중더불어 민주당의원과자유 한국당의원들간고 성이오감. 2.김석기자유한국 당의원의평양수도 발언에여야간공방 으로현안질의지연

《참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일자별)》

위원회	감사반	피감기관	단체장	감사일	감사 시작	감사 종료	출석 의원수	특이사항 (이슈)
국토교통	지방1반	경상북도	이철우	10.16.	10:02	14:53	15	신규 원전 백지화, 도청 신도시 재개발재검토
국토교통	지방2반	충청북도	이시종	10.16.	10:00	13:14	15	KTX 세종역신설논 란
행정안전	전체	서울시	박원순	10.18.	10:06	21:06	22	채용비리
행정안전	전체	경기도	이재명	10.19.	10:04	17:33	22	도지사 개인사문제
행정안전	지방1반	강원도	최문순	10.22.	10:04	15:09	11	올림픽 후속대책
행정안전	지방2반	세종시	이춘희	10.22	10:01	12:13	11	재난대책
행정안전	지방2반	대전시	허태정	10.22	14:01	16:14	11	청년일자리
국토교통	전체	서울시	박원순	10.22.	10:07	00:05 (익일)	30	교통공사채용 비리
행정안전	지방1반	경상남도	김경수	10.23.	10:09	15:43	10	드루킹 사건
행정안전	지방2반	충청북도	이시종	10.23.	10:16	13:21	11	강호축 등 현 안, 제천화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전체	강원도	최문순	10.23.	10:03	15:34	17	산림회복
행정안전	지방1반	경상북도	이철우	10.25.	10:44	15:45	10	탈원전대책 등
행정안전	지방2반	광주시	이용섭	10.25.	10:23	14:34	11	감사중 방청 남성이 쓰러짐
행정안전	지방1반	울산시	송철호	10.26.	9:58	14:58	9	주력산업, 경제살리기
행정안전	지방2반	제주도	원희룡	10.26.	10:02	12:54	11	제주 제2공항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 수	피감 기관 수	감사 일수	감사 진행 시간	순 감사 시간	시찰 횟 수	국회 일수	영상 회의 수	감사 위원 출석률
국회운영	이인영(민)	28	9	2	24:04	19:19	0	2	3	100.00%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6	11	97:46	75:32	0	3	14	98.81%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84:3	69:39	1	9	10	95.00%
기획재정	이춘석(민)	26	29	10	92:36	65:50	1	6	12	78.99%
교육	이찬열(바)	16	91	8	59:12	61:55	1	3	13	95.6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노웅래(민)	20	82	12	119:5	77:39	1	10	10	95.00%
외교통일	윤상현(한)	22	31	15	92:24	32:17	0	4	4	87.34%
국방	안규백(민)	17	64	11	57:45	49:22	5	2	8	96.26%
행정안전	전혜숙(민)	22	32	11	112:4 2	84:36	1		20	97.19%
문화체육관광	안민석(민)	16	75	10	55:18	37:50	3	7	7	95.5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황주홍(평)	28	34	10	84:1	60:09	0	9	10	90.00%
산업통상지 원중소벤처 기업	이종구(한)	28	61	11	111:4	66:43	1	10	10	99.29%
보건복지	김세연(한)	22	45	10	85:57	73:26	1	7	9	93.94%
환경노동	김학용(한)	19	71	12	103	77:10	2	8	10	99.38%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32	10	110:3 3	73:54	0	4	11	98.18%
정보	이혜훈(바)	11	5	3	16:56	16:56	1	0	0	93.18%
여성가족	인재근(민)	17	6	2	9:01	6:20	1	1	1	100.00%
17개	17인	364	788	159	1314:04	948:37	19	85	152	94.93%
참고	1. 외교통일위의 경우 해외공관 국정감사시간 포함하였고, 순감사시간에서는 제외한 것임 2. 행정안전, 국방, 정보위원회의 회의시간은 국회공보시간을 참고하였음 3.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회수는 2019. 11. 29. 기준임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 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시찰 횟수	국회 사용 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평균 감사위 원원 출석률
국회운영	홍영표(민)	28	8	2	22:27	0	2	3	98.21%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3	12	117:42	1	2	14	94.84%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99:53	2	7	10	95.00%
기획재정	정성호(민)	26	28	11	111:27	1	5	13	99.23%
교육	이찬열(미)	15	63	9	83:50	1	7	8	88.24%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노웅래(민)	21	80	12	112:20	1	9	10	83.33%
외교통일	강석호(한)	22	30	17	93:31	1(0)	3	17	98.86%
국방	안규백(민)	17	66	12	61:42	6	3	7	81.48%
행정안전	인재근(민)	22	37	11	137:48	0	3	25	96.73%
문화체육 관광	안민석(민)	17	81	10	60:50	3	7	7	84.03%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황주홍(평)	19	36	12	104:14	0	10	12	89.47%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홍일표(한)	29	61	12	124:03	3	10	10	100.0%
보건복지	이명수(한)	22	37	11	106:35	1	8	10	95.45%
환경노동	김학용(한)	16	68	11	100:13	0	8	10	91.25%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29	10	102:02	3	3	10	98.89%
여성가족	전혜숙(민)	17	6	2	9:07	1	1	1	94.12%
계		298 (343)	748	165 (161)	1447:44	24 (23)	88	167	93.07%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9명 중 국회의장 문희상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과 시간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 (해외시찰 1회 계획하였으나 무산됨)
4.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였음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8년 12월 7일 기준임)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2017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 일수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	평균 감사위원 원출석률
법제사법 (권성동)	17	72	12	92:11	2	5	95.0%
정무 (이진복)	24	44	12	102:48	8	9	92.4%
기획재정 (조정태)	26	28	11	97:13	6	10	91.3%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신상진)	24	80	12	97:49	9	12	87.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22	11	116:18	6	17	95.6%
외교통일 (심재권)	22	28	15	91:10	4	4	97.7%
국방 (김영우)	17	63	13	50:51	2	5	93.4%
행정안전 (유재중)	21	32	12	105:14	3	13	90.5%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설훈)	19	34	12	114:42	8	9	87.7%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장병완)	30	59	12	113:52	10	10	98.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	12	103:49	8	9	92.4%
환경노동 (홍영표)	16	60	11	92:34	5	8	90.0%
국토교통 (조정식)	31	28	11	98:34	3	6	96.8%
국회운영 (정우택)	28	8	2	21:12	2	2	98.2%
여성가족 (남인순)	17	6	2	9:18	1	1	100.0%
계	343	696	160	1307시간 35분	77	120	93.77%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9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과 시간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
4.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였고, 과방위와 교문위는 각 1일 추가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감사를 이틀에 걸쳐 하였음.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7년 12월 1일 기준임)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참고 20대 국회 1차년도(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2015)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2015)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2015)	의원 출석률 전체/정상화이후만 (2015)
법제사법 (권성동)	17	72(72)	12(12)	101:49 (119:04)	2(2)	5(6)	90.2%/96.8% (100%)
정 무 (이진복)	24	44(44)	11(13)	104:28 (102:29)	9(6)	9(8)	99.6% (94.6%)
기획재정 (조경태)	26	28(28)	12(12)	88:45 (119:24)	8(6)	9(8)	99.6% (92.9%)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 (신상진)	24	78(77)	12(11)	80:30 (97:14)	8(8)	10(11)	94.2%/97.7% (86.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16(118)	12(12)	153:30 (143:21)	11(8)	11(10)	78.7%/97.0% (97.5%)
외교통일 (심재권)	22	41(30)	14(15)	43:56 (67:57)	4(3)	4(3)	76.1%/100% (85.87%)
국 방 (김영우)	17	53(52)	13(12)	50:53 (68:54)	5(4)	5(6)	83.7%/90.8% (94.8%)
안전행정 (유재중)	22	31(34)	12(12)	72:42 (106:59)	5(5)	6(13)	100.0% (95.2%)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김영춘)	19	35(42)	14(13)	101:47 (116:56)	5(5)	6(11)	83.3%/99.3% (98.1%)
산업통상 자원 (장병완)	30	56(55)	12(12)	103:21 (105:22)	8(7)	8(8)	86.7%/100% (94.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32)	12(11)	112:27 (107:28)	6(7)	8(9)	84.1%/97.7% (93.3%)
환경노동 (홍영표)	16	58(59)	11(12)	97:51 (96:05)	5(7)	7(9)	86.1%/100% (87.5%)
국토교통 (조정식)	31	29(36)	11(11)	104:44 (101:28)	4(2)	5(5)	83.0%/99.1% (95.3%)
계	299 (297)명	687 (694)개	158 (158)일	1216시간43분 (1352:41)	80 (73)일	97(107)개	88.10%/98.28% (93.7%)

-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300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포함하면 감사시간은 37시간 36분(지난해 20시간 35분)이 더 증가함.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함)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6년 10월 25일 기준임, 참고로 지난해는 2015년 11월 8일 기준임)

< 결임 상임위원회 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지난해)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영상 회의록	감사위원 출석률 (지난해)
국회운영 (정진석)	28	8(8)	2	21:42 (20:02)	2	3(3)	100% (96.4%)
여성가족 (남인순)	16	6(6)	1	15:54 (11:35)	1	1(1)	100% (100%)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0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